미래한국리포트
FUTURE KOREA REPORT
2014 · SBS

한국사회 재설계

공공성 그리고 착한성장사회

일시 / 2014년 11월 12일 수요일 오전 7시~9시 30분

장소 /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발표 / **위험 사회, 대한민국** / 정호선 SBS기자
재난은 왜 반복 되는가 /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지속가능사회의 조건 /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사회적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SBS 제언

강평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미래한국리포트

FUTURE KOREA REPORT

2014 · SBS

미래한국리포트는 SBS가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하는 연중 프로젝트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 의제를 선정해
다각적인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2004년 1차 행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열두 차례에 걸쳐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문제를 선제적으로 다뤘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사안의 중대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이전인
2004년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시켰고,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미리 내다보고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백년대계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재창조'를 통한 활로를 모색했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고통지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를 주제로 다뤄 녹색성장의 공감대를 확산시켰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전략과 성숙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 신뢰와 소통의 대안, 양적 성장 위주의 경쟁 방식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등 국민과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2년에는 성장보다 분배 정의가 시대정신으로 부상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 사회를 위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착한 성장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조건으로 사회 통합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조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틀,
즉 '거버넌스'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미래한국리포트

제11차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 한국형 거버넌스는?
제10차 착한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제 9차 경쟁의 딜레마
제 8차 2010 대한민국 '소통'
제 7차 위기를 넘어서
제 6차 기후의 역습
제 5차 꿈을 주는 리더십을 찾아서
제 4차 행복의 조건과 가족의 미래
제 3차 한국의 마지막 선택, 교육
제 2차 일자리 위기와 노동의 미래
제 1차 고령화 충격, 활로는 없는가?

목 차 CONTENTS

01	개요 및 일정	
04	개회사	**이웅모** SBS 사장
06	축사	**박근혜** 대통령
08	축사	**정홍원** 국무총리
12	PRESENTATION 1	**위험 사회, 대한민국** **/ 정호선** SBS 기자
38	PRESENTATION 2	**재난은 왜 반복되는가** **/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70	PRESENTATION 3	**지속가능사회의 조건** **/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106	PRESENTATION 4	**사회적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140	PRESENTATION 5	**SBS 제언**
150	강평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SBS 사장

이 웅 모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지혜**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SBS

한국사회 재설계

공공성 그리고 착한성장사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사장 이웅모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세월호 사고가 몰고온 고통을 극복하고
희망을 설계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철저한 학습과 교훈을 통해 재난에 대한 예방과 함께
사회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대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SBS는 올해 미래한국리포트에서 한국사회가 과거의 재난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한
원인과 배경을 규명하고, 앞으로 한국사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해서 연구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공공성의 부재'가 반복된 재난을 불러오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낮은 투명성과 부패 구조로 인해 '저신뢰의 함정'에 빠지면서
제도마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공공성 개념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의 재난 극복 과정과 연관시켜 논의를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을 설계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12차 미래한국리포트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 근 혜



제12차 미래한국리포트 개최를 축하합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SBS 임직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계 전문가,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년째를 맞는 미래한국리포트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을 놓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착한 성장 사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도
국가혁신과 경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발전 모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변화와 혁신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렵다고 안주하거나 두렵다고 멈춰 선다면,
국가발전도, 국민행복도 요원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나아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안전하고 행복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사를 통해 '미래한국'이 나아갈 올바른 비전이 제시되고,
국가혁신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정 홍 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열두 번째 맞이하는 '미래한국리포트'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처럼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윤세영 회장님과 이웅모 사장님을 비롯한
SBS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BS는 그동안 '미래한국리포트'를 통해서 경제위기와 고령화, 일자리 창출과 교육문제 등
여러 가지 과제를 논의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발표회의 주제로 삼고 있는
'한국사회 재설계-공공성과 착한 성장사회'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필요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고 유용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고용불안과 복지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을
더 이상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풀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식과 발상을 전환하여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시대는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와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공기업 혁신 등을 통해 공공분야부터 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청렴과 신뢰, 질서의식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처럼 성숙해지면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들을
소통과 합의로 풀어가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도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논의하는 '착한 성장 사회'도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받는 언론이야말로 의제설정과 공론문화를 정립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를 비롯한 우리 언론이 '행복한 선진 공동체'를 만드는 데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되는 '공공성'에 관한 연구 내용이 우리 사회를 재설계하는 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를 축하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 래 한 국 리 포 트

History / 주제영상

SBS 미래 한국 리포트는
'2004년 고령화 충격, 활로는 없는가'를 시작으로
일자리 위기와 행복한 가정의 조건,
기후의 역습, 경쟁의 딜레마 등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미래에 닥칠 위기들을
한발 앞서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Social Quality 즉 '사회의 질'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2012년에는 대통령 후보들과 함께
'착한 성장 사회를 위한 리더십'을 주제로 남유럽의 경제위기 상황을 분석해
바람직한 복지국가의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에는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 한국형 거버너스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거버넌스의 새로운 유형을 모색했습니다.



올해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는 서울대 사회발전 연구소와 공동으로
대형 재난을 경험한 다섯 나라,
한국과 네덜란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연구 분석해

'한국사회 재설계 – 공공성 그리고 착한성장사회'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래한국리포트
FUTURE KOREA REPORT
2014 · SBS

Presentation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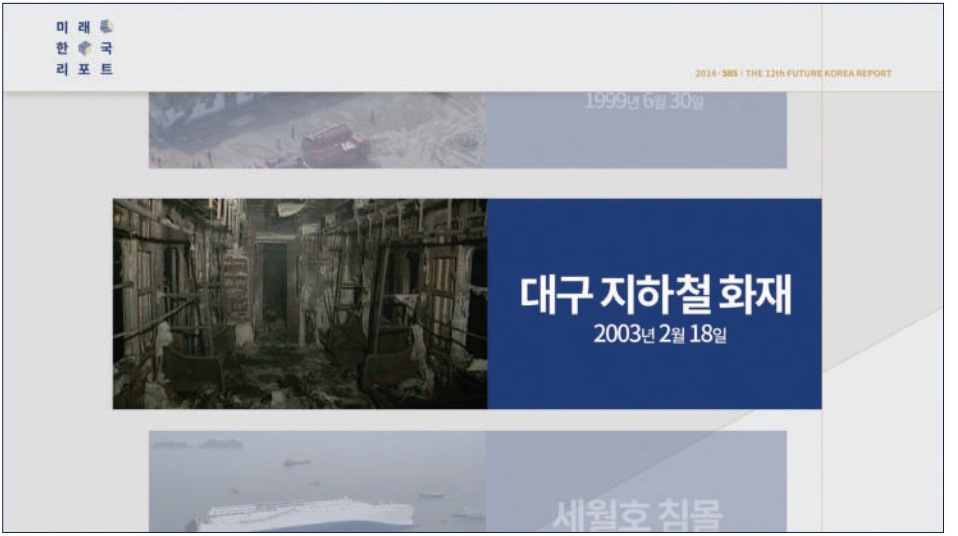
위험 사회, 대한민국

정호선 SBS 기자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또 사고 얘기인가 혹시 불편한 느낌이셨는지요.



이렇게 우리는 잊을만하면
끔찍한 사건 사고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왔습니다.



사실 사고 다발지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산과 바다는 물론 도시 한복판, 건물 안과 밖, 지상과 지하를 막론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워낙 예기치 못한 위험 상황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어린이와 청소년, 노년층 같이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습니다.

결국 누구도 우리 사회에선 사고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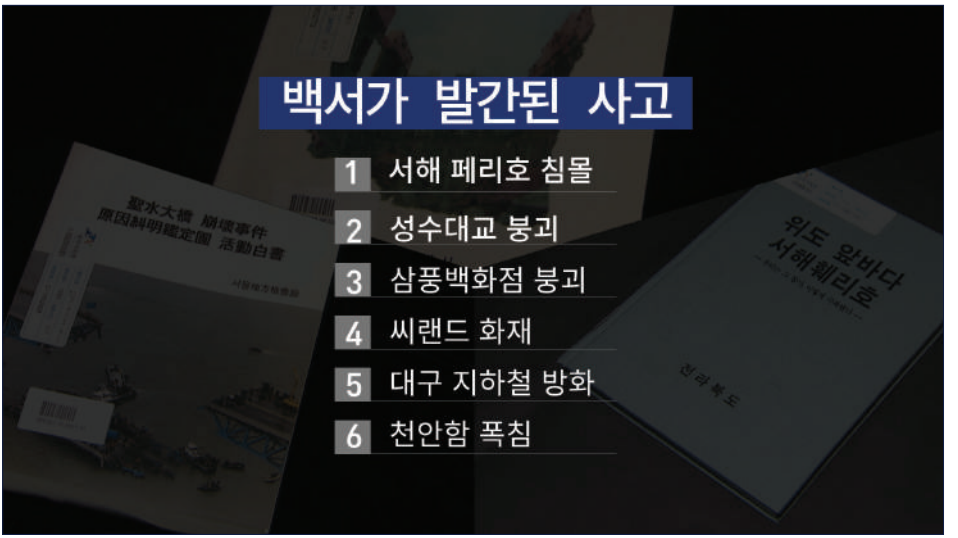


지겹다며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참사 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나,
아니, 바뀌긴 바뀌었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때때마다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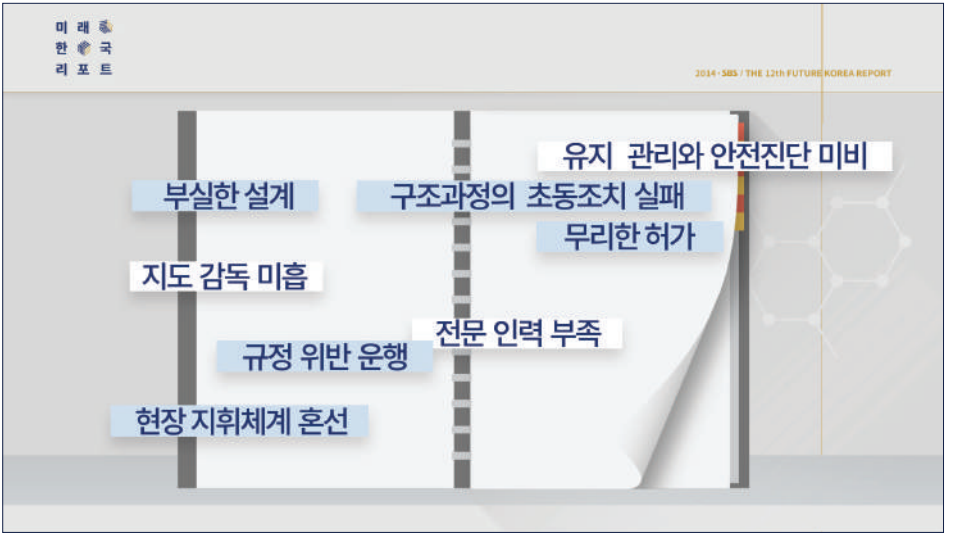
사고가 왜 발생했고,
수습과 구호 과정의 문제점은 뭐였는지
낱낱이 적시한 백서는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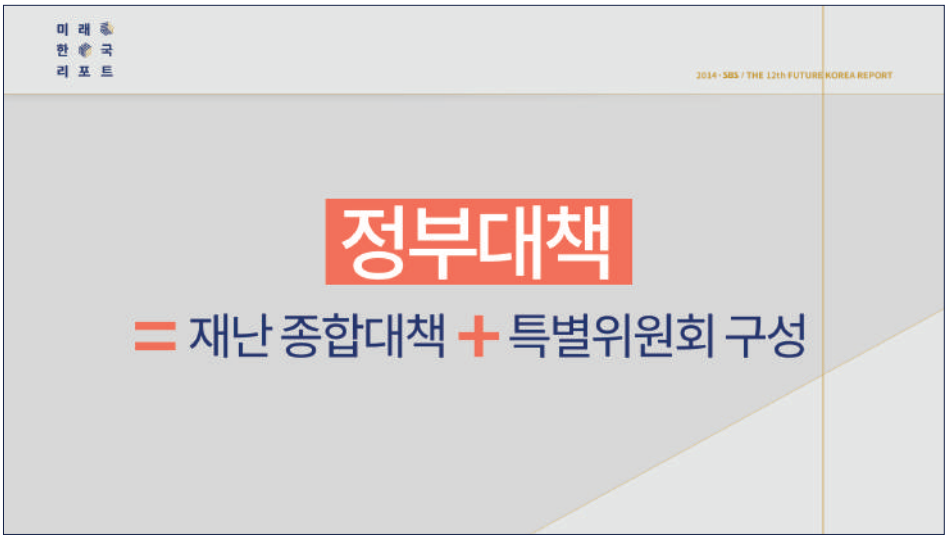
사고 후 대응을 파악하기 위해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지난 20년간 백서는 지금 보시는 6개 사고에 대한 것밖에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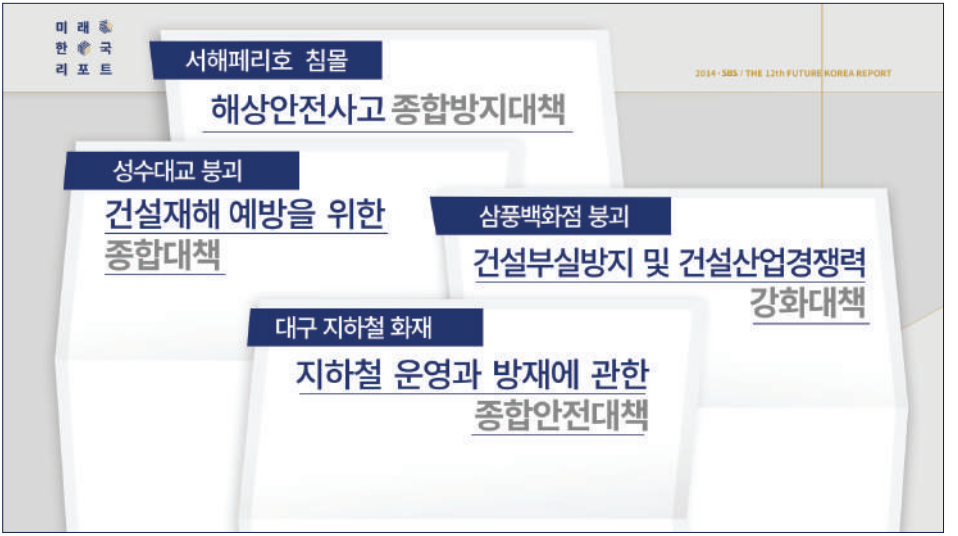
개수가 적다면 내용이 충실한 걸 기대했는데요,
재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사고 백서가 선진국에 비해
향후 과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부분이 미흡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다시 펴보고 학습하기보다는
먼지가 쌓여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6개 사고 백서를 찾아보니
‘부실한 설계’와 ‘무리한 허가’,
‘유지 관리와 안전 진단 미비’,
‘규정 위반 운행’,
‘전문 인력의 부족’, ‘지도 감독 미흡’
그리고 ‘구조과정에서 초동조치에 실패’했고,
‘현장 지휘체계 혼선이 피해를 키웠다’는 문제점이
빠지지 않고 반복해서 발견됐습니다.



되풀이 돼 왔던 정부대책은
'백화점식 종합대책'과
'위원회 구성'으로 요약되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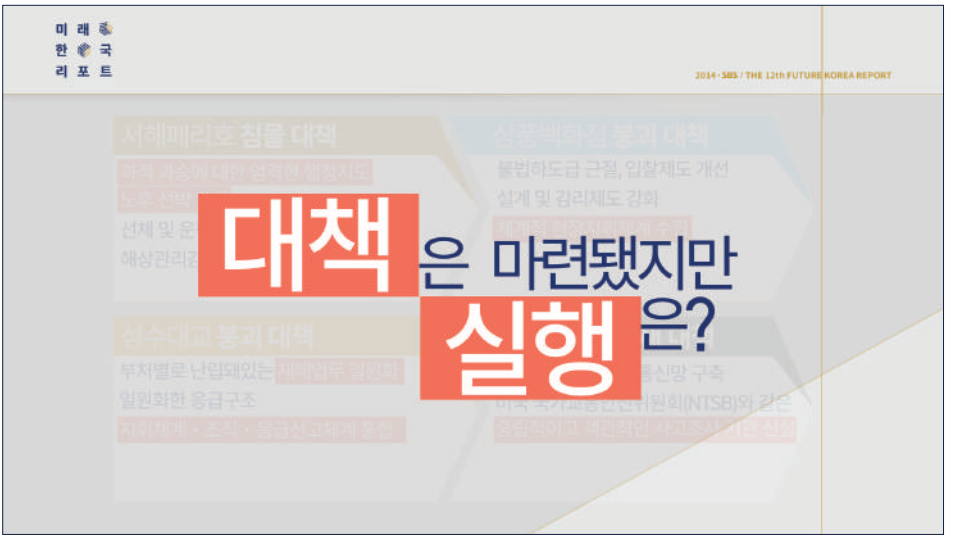


해상안전사고 종합방지대책,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그리고 건설부실방지-건설산업경쟁력 강화대책,
지하철 운영과 방재에 관한 종합안전대책,
이렇게 길고 방대한 대책들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서해페리호 사고 때
과적, 과승에 대해 엄격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노후선박을 교체하겠다고 선언했었고요,
여러 사고 때마다
부처별로 난립돼있는 재해업무를 일원화하겠다,
응급신고체계를 통합하겠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조사 기관를 신설하겠다는 약속 등이
거듭 거론됐지만 아직 실현되진 못했습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달라지느냐,
아니면 학습하지 못해 비극이 반복되느냐는
국가의 위험수준을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10년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큰 충격에 빠졌던 미국은
어떻게 변화를 이끌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 뉴올리언즈를 다녀왔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는 2005년 8월,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이재민 110만명,
확인된 사망, 실종자만 2500명을 넘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 재해였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도심에선 그때 흔적을 찾긴 어렵습니다.

재즈의 고향답게 곳곳에선 재즈 공연이 한창이고,
범람했던 강가에선 시민들이 여가를 즐깁니다.

하지만 참혹한 재난이 할퀴고 간 상처는 아직도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유령 마을이 돼버린 주택 안에는 버려진 가재도구들이 널려있고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집 전체가 물에 잠기자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지붕을 뚫은 집들은
흉물스럽게 방치돼있습니다.



 # 키쓰 브라운 / 뉴올리언스 주민

"모두가 대피하려고 했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전부 쓸어가 버리는 물살, 그런 상황을 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공포스러웠습니다."

피해가 증폭된 것은 리더십과 시스템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대피와 구호에 실패했고,
9.11 이후 재난보다는 테러대응에 주력한 연방재난관리청도 무기력했습니다.

 # 크리스 카메론 / 핸즈온(자원봉사 시민단체) 디렉터

"(그 당시) 뉴올리언스 시민들은 지역, 정부, 국가 차원의 믿음이 다 없었습니다.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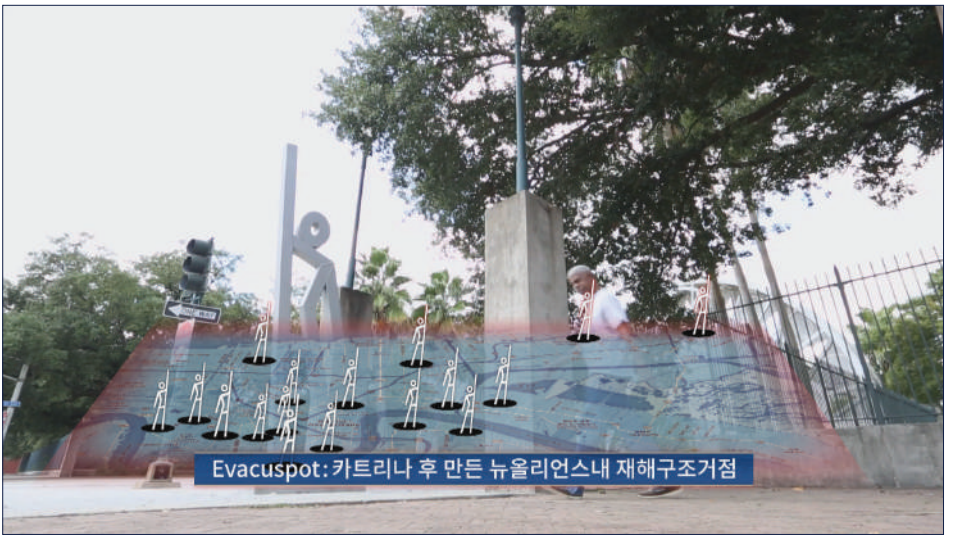


그래도 미국은 비극을 그냥 잊진 않았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해 의회를 중심으로
6개월동안 22차례 청문회를 열었고,
300여명이 증언대에 섰으며
83만여쪽의 자료를 조사, 검토해
최종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의회는 1년여만에
'포스트 카트리나 재난관리개혁법'을 처리했고,
재난관리청을 독립적인 기구로 원상복구시켜
권한과 위상도 강화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변화와 맞물려
지역 사회도 움직였습니다.



터파기부터 기둥 세우기, 벽을 만들고 페인트를 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바빠질수록 집은 형태를 갖춰갑니다.

NGO가 새로 건립한 재즈 음악인 마을은
단순한 '거주지' 개념을 넘어, 지역 문화와 정서를 되살렸습니다.

카트리나 이후 재즈 뮤지션들이 뉴올리언즈를 대거 빠져나가자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마을을 만든 겁니다.

 # 켈빈 존슨 / 재즈뮤지션
"태풍이 이곳의 독특한 풍조까지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이 마을은 바로 그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뉴올리언스의 풍조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통신이 두절돼 속수무책으로 죽어갔던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한 손을 높이 든 모양의 4미터 높이의 '구조거점'을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재난 때 무조건 이곳에 모이면 구조될 수 있다는,
카트리나를 잊지 말자는 '사회적 약속' 을 형상화한 겁니다.



 # 조이 브루스 / 자원봉사자

"(허리케인 시즌이 되면) 준비는 됐는지, 대피계획은 어떤지,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등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마음가짐을 다잡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일은
일회성이 아니라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 더글라스 워커 / 심리치료 전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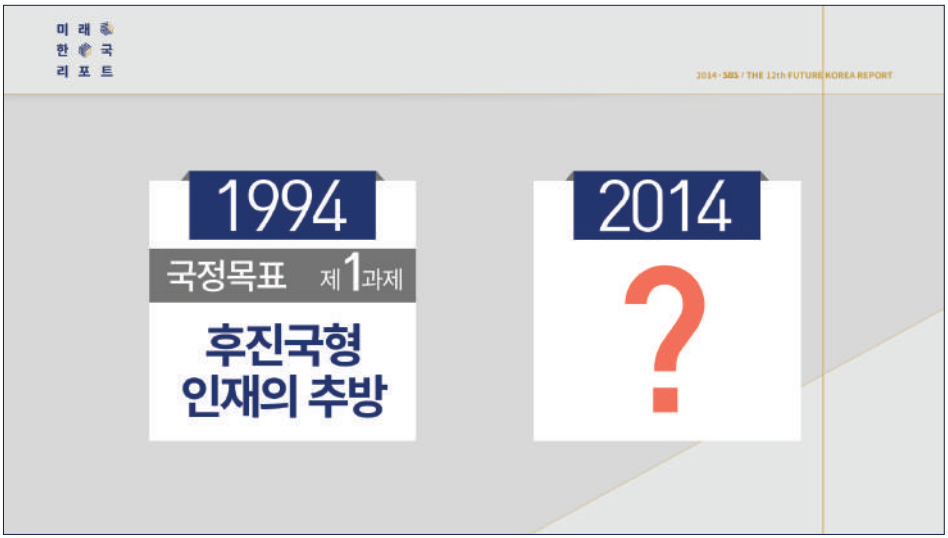
"재난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관심과 치료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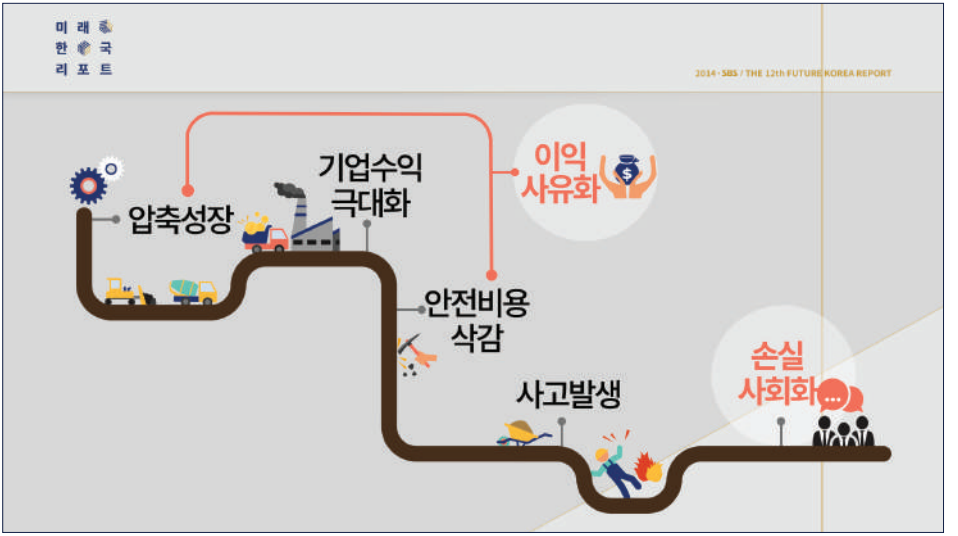
2012년 10월,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가 미 동부를 강타했습니다.

예보와 대피, 복구 작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돼
대형 재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고통스런 기억이지만 상처를 잊지않고 끊임없이 되짚어야
재난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1994년, 그러니까 20년전에
정부의 국정목표 제 1과제가
바로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도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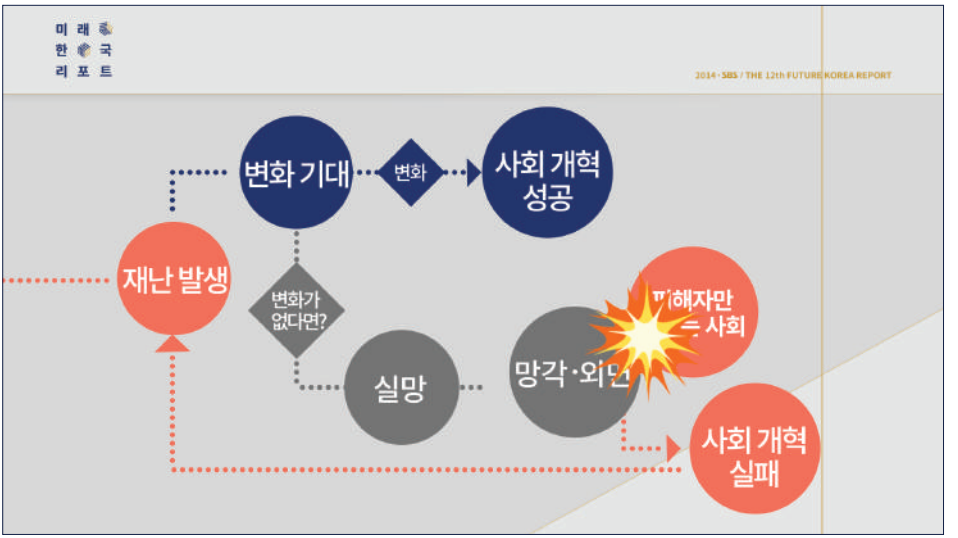


압축성장의 부작용으로 응축돼왔던 '위험'이
대형 재난으로 터져나오는 패턴은
이른바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되는
'비정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는 '국가대개조'라는 획기적 개혁을 선언했는데요.

과연 우리 사회, 얼마나 달라졌다고 느끼십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아... 이젠 좀 우리사회가 바뀌겠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고 재난 자체를 외면합니다.

사회는 전부 잊어버리는데 나만 기억하면 고통이 커지니까
자연히 '망각'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당사자들은 조바심이 납니다.
자신들이 앞장서 나서지 않으면
관심에서 잊혀질까 두려워하고,
피해자들의 절규는 망각하는 사회와 충돌해
갈등은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희생된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서라도
재난을 ‘개인적 망각’ 에서
‘사회적 기억’ 으로 승화시켜 ‘변화’ 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변화에 번번이 실패하는지,
서울대 이재열 교수의 분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래한국리포트
FUTURE KOREA REPORT
2014 · SBS

Presentation 2

재난은 왜 반복되는가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앞선 발표에서는 20년 전의 재난이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재난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위험 원인이 있을 때 이를 가볍게 여기고 관용하면,
쉽게 말해 그냥 지나치면 정책이나 제도가 다소 문제가 있어도
그냥 두고 오히려 안전관련 규제를 완화시키게 됩니다.
그럴 경우 또 다른 재난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 재난으로부터 배워 미리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전학습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확실히 고치자는 건데,
우리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재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누구의 탓인지 희생양을 찾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주무장관의 사표를 받고 실무자를 처벌하는데 그칩니다.
결국 이렇게 종결하면 개혁은
백지화 혹은 교착되고 재난은 다시 반복됩니다.



이런 위험관용, 학습의 부재, 희생양 찾기 등은
전형적인 내재화 전략입니다.
내재화 전략은 시스템의 변화 없이
희생과 재난 간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내는 셈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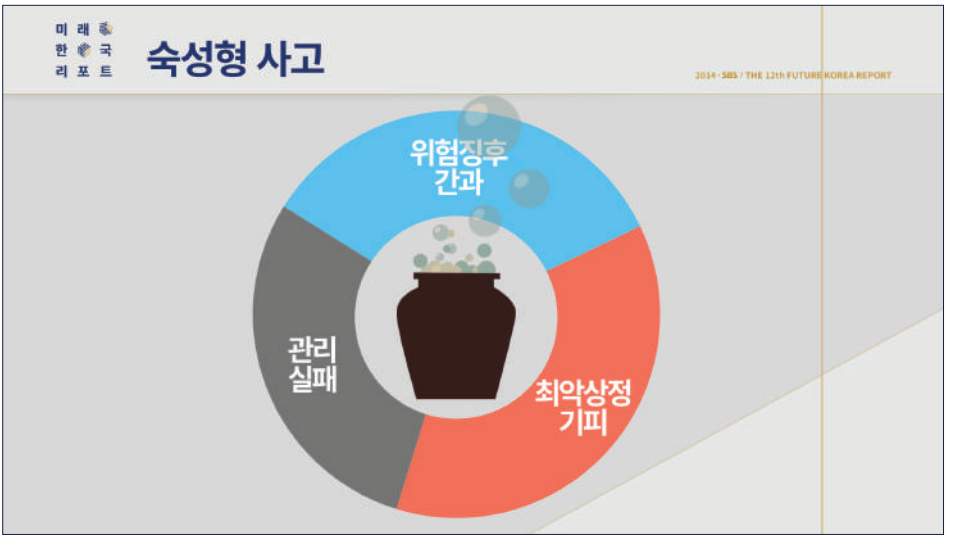
때문에 위험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시스템이 전제해 온 가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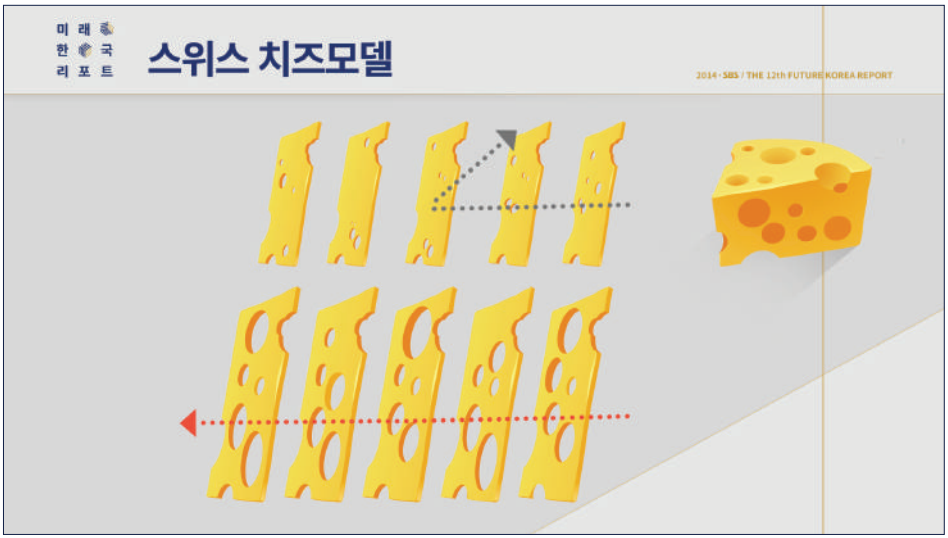
이것을 외재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문제를 외부에 명백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외부전문가까지 참여해 재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걸맞게 조직의 전략과 체질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위의 공식에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과거의 경험으로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재화 전략만을 반복해서 사용했기에 생겨난 사고였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숙성형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널려 있는 위험 징후들을 간과했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 것을 기피했으며,
설령 개개인이 위험요소를 인지했다 하더라도
조직 차원에서 전체적인 양상을 종합해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달 많은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도
같은 이유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스위스 치즈와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요.
스위스 치즈는 한 겹으로는 쉽게 뚫리지만
여러 겹으로 쌓으면 마지막까지 뚫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뚫리게 되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설마 이정도야' 하는 각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일본의 원전사고도 전형적인 숙성형 사고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동부를 강타한 지진해일은
일본 전역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지진해일 때문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과연, 불가피한 사고였을까.

도쿄전력에서 17년 동안 근무했던 기무라 씨,
그는 원전 사고가, 예고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후쿠시마 원전에 근무할 당시부터
원전은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 기무라 토시오 / 前 도쿄전력 직원, 17년 근무
"가느다란 배관이 부식돼 해수가 누설됐고
지하에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있는데 가동되지 않았어요."



회사에 여러 번 위험상황을 알렸지만
회사는 번번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 기무라 토시오 / 前 도쿄전력 직원, 17년 근무
"진실을 말하고 싶은 직원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회사에서 해고되니까."

도쿄 전력의 이런 문제는
후쿠시마 현 前 지사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 사토 에이사쿠 / 후쿠시마 前 지사
"제가 가장 분노했던 것은
내부 고발이 있었을 때 그걸 속이고 데이터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경제산업성이 (내부고발) 내용을 도쿄 전력에 미리 흘렸고.
특히 원전 회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권을 나누던
이른바 원전 마피아들의 부패는
결국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고가 난 이후, 도쿄전력과 정부의 대응방식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사고 직후 도쿄 전력이 자신에게 보고한 내용도 엉터리였다고 털어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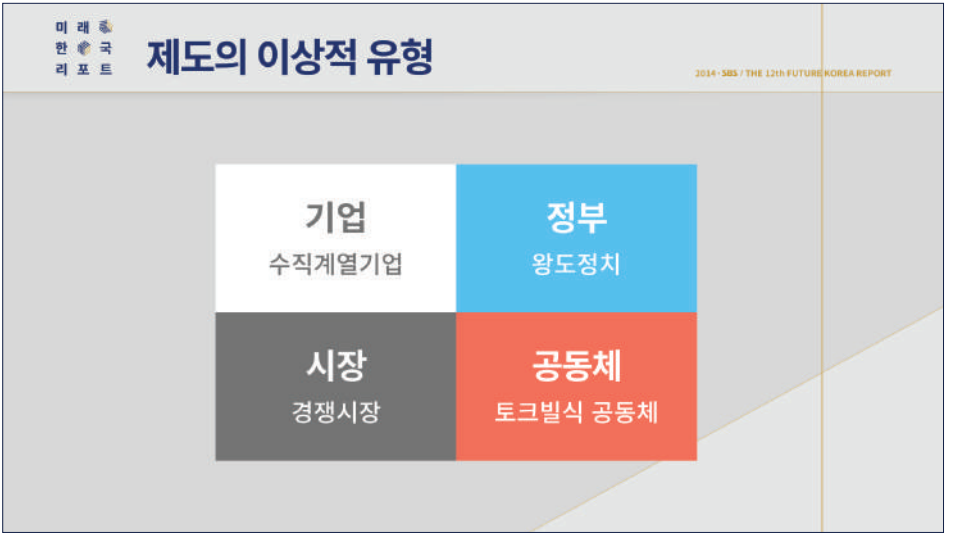
 # 간 나오토 / 前 일본 총리
"처음 받은 원전에 대한 보고는,
지진지역의 모든 원전이 무사히 정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50분이 지난 시점에서 다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후쿠시마 제 1원전에서 모든 전원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도쿄 전력 본사와 후쿠시마 원전 책임자간의 영상회의록에는
관계자들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 소장 "본점, 본점!"
도쿄전력 "예, 본점."
소장 "본점, 본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3호기, 아마도 수증기인 듯 폭발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긴급 연락!
도쿄 전력 "현장사람 대피! 대피! 현장사람 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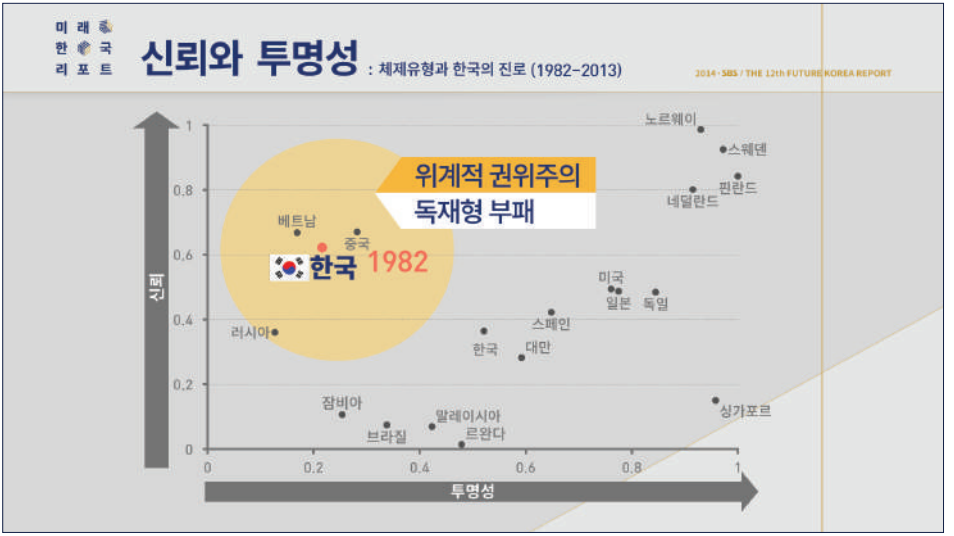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도쿄 전력은 직원과 그 가족들을 가장 먼저 대피시켰고,
아무런 정보도 없었던 주민들은
정부의 피난 지시만을 기다리다가 결국 피폭을 당했습니다.
원전마피아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부패, 비밀주의,
그리고 사고 대처에 무기력한 정부의 모습은
우리 세월호 사고와 너무도 닮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동일본 원전사고.
두 가지 사고에서 보셨듯이
이런 시스템의 실패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안 들여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를 보면
전 세계에 좋다는 것은 다 들여와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것이죠.
제도주의 경제학에서는 시장이 작동을 안 하면 정부로 풀고,
정부 실패는 시장으로 푼다고 이야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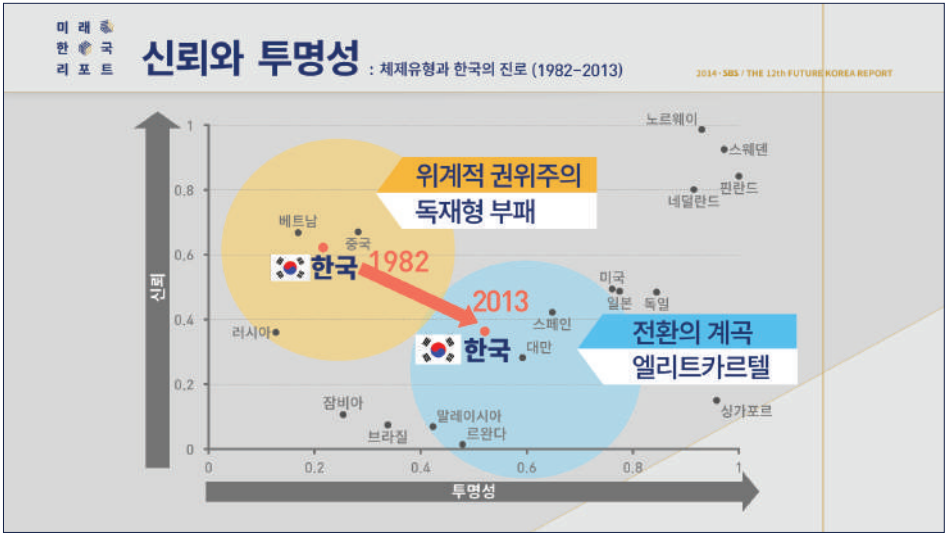


하지만, 결정적으로 빠져있는 것이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모든 이상적인 제도들은 모두 왜곡되고 변형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모델이 왕도정치 모델입니다.
덕스럽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고 그를 백성이 따라가는 식인데
이것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면 마피아처럼 되어 버립니다.
공동체는 폐쇄적인 연고 집단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반적인 시스템의 이완이나 부패는
이런 숙성형 사고의 온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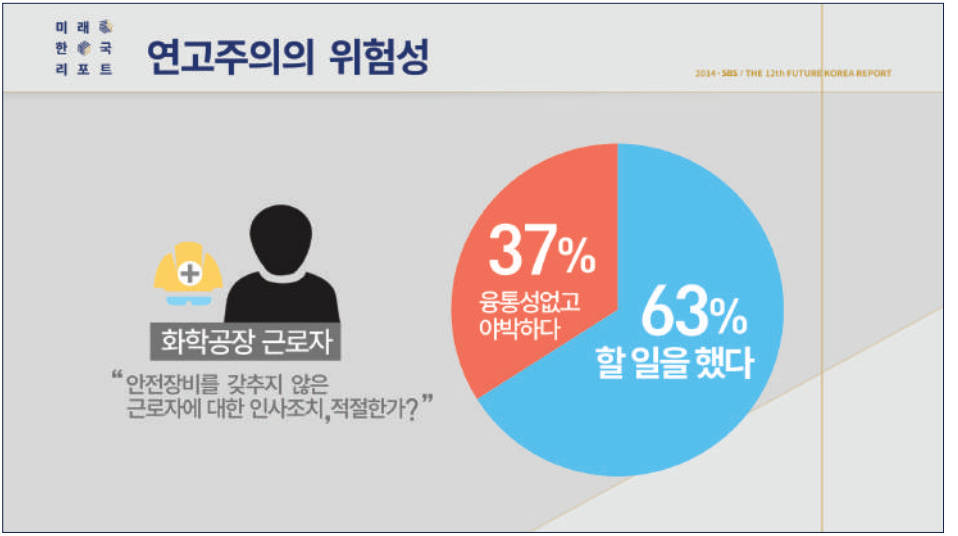
한국은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이 그래프에서 수직축은 신뢰 수준을, 수평축은 투명성을 의미합니다.

30년 전 권위주의 시대 한국은 낮은 투명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의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계적 권위주의 모델이 작동했습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따라 의기투합하여 '돌격 앞으로' 방식으로
고지탈환전을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것이 박정희 모델이고 정주영 모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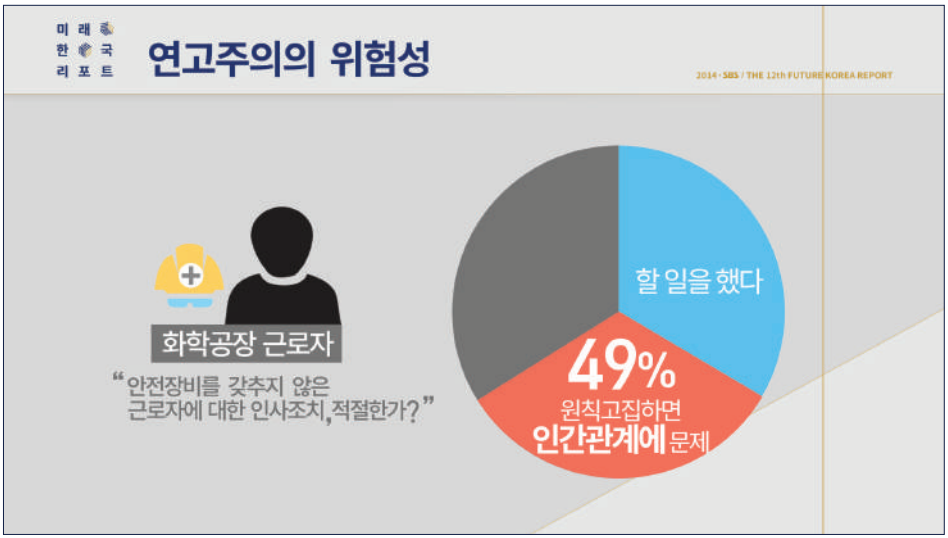


그러나 민주화 이후 제도에 대한 신뢰는 급속히 추락한 반면,
이후 30년간 경제가 크게 성장할 동안 투명성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사회로 우리는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하지 못하면
헤어나지 못할 '전환의 계곡'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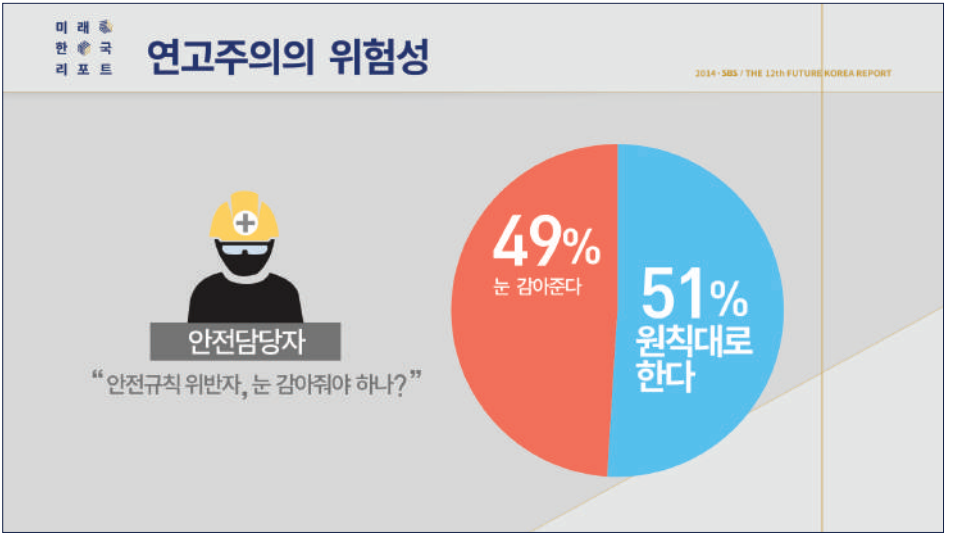
관피아 문제는 전환의 계곡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전형입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
최고 정치지도자를 둘러싼 독점적인 부패사슬은 약해진 반면
'엘리트 카르텔'로 바뀌어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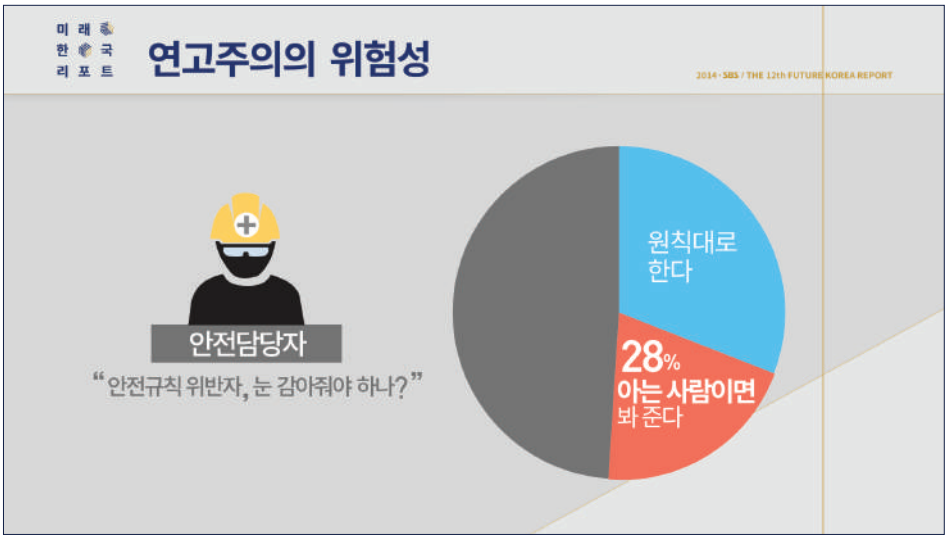
더구나 강한 연고주의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화학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물어보니,
응답자의 2/3는 안전과 관련해서
엄격하게 규칙을 집행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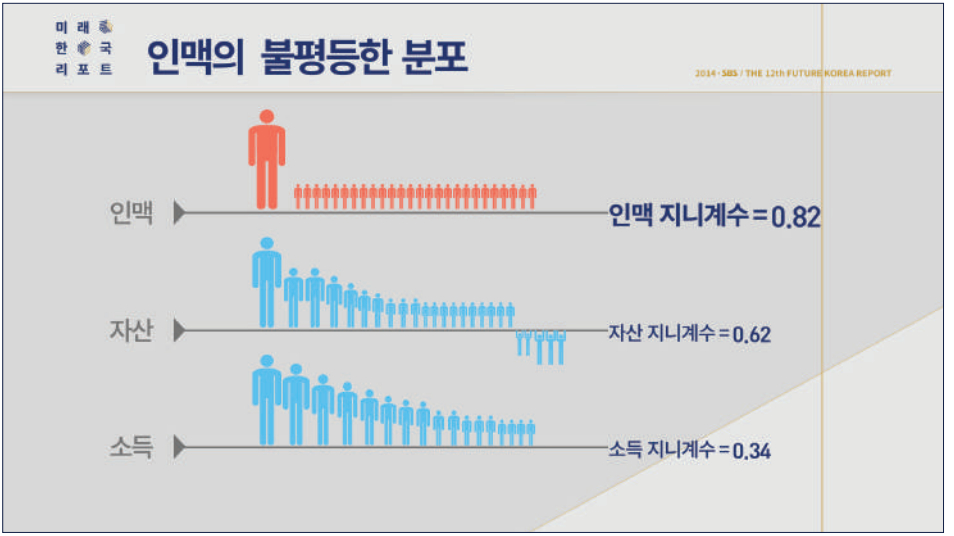
그러나 정작 그렇게 답한 이들 중 절반은
원칙을 고집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답했습니다.
'자신 없는 원칙론'이 다수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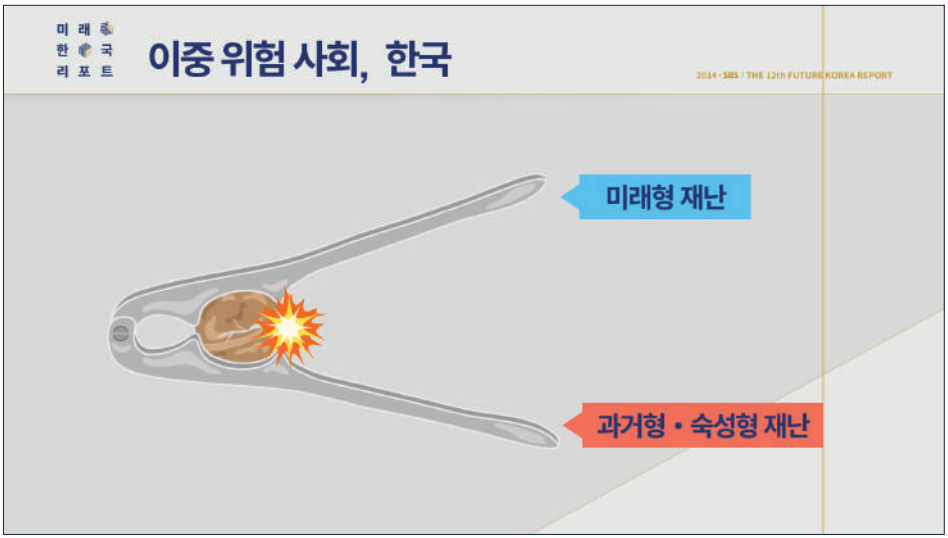
자신이 안전담당자라면
규정 위반자를 원칙대로 조치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들 중 30%는
상대가 아는 사람이면 봐 주었을 것이라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안전보다 연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사람들에게 연고는 사회생활의 윤활제입니다.
그런데 인맥의 분포는 소득이나 자산보다 훨씬 더 불평등합니다.
대부분 활용 가능한 유효 인맥은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됩니다.
리더들이 통제할 수 있는 정보나 자원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들이 약한 수준의 봐주기를 해도 조직에는 매우 치명적이 됩니다.



우리는 이중위험사회에 와 있습니다.
압축적 산업화의 후유증인 숙성형 재난의 위험을
미처 해결하지 못한 상태인데
미래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증대, 네트워크화, 지구적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경계가 소멸되는 것이 미래형 위험사회의 특징입니다.

첫째, 공간적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사와 미세먼지는 곧바로 우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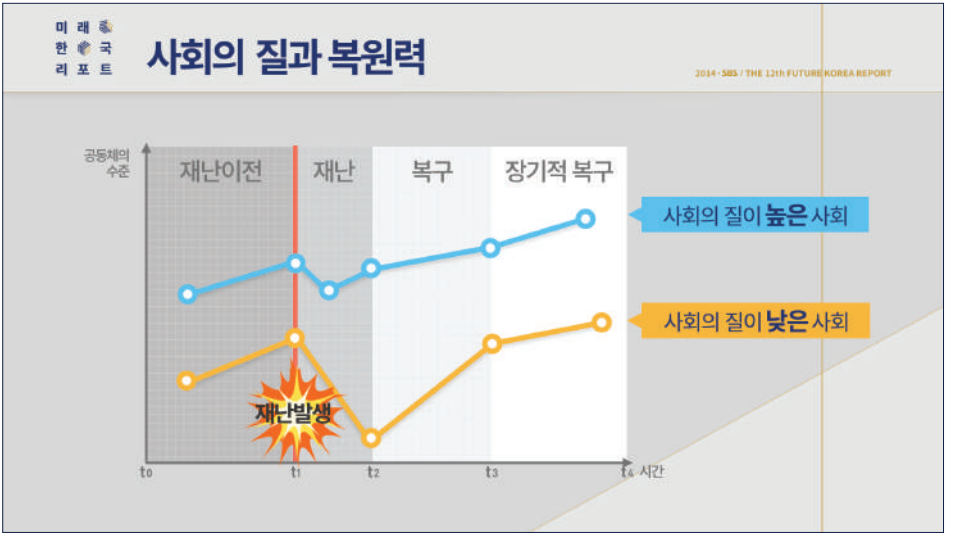
둘째, 시간의 경계도 무의미해 졌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에서 보듯, 현세대의 무관심이 미래세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셋째, 사회적 책임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태안 기름유출사고에서 보듯 엄청난 피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책임자는 분명치 않습니다.



또 다른 미래형 위험은 정상사고입니다.
매우 복잡하고 단단하게 결합된 시스템에서
사소한 인간적 실수나 기계적 결함이
피하기 어려운 돌발적 재난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로 구성된
지하철, 고속철도, 통신망과 가스배관 등은
늘 돌발적 사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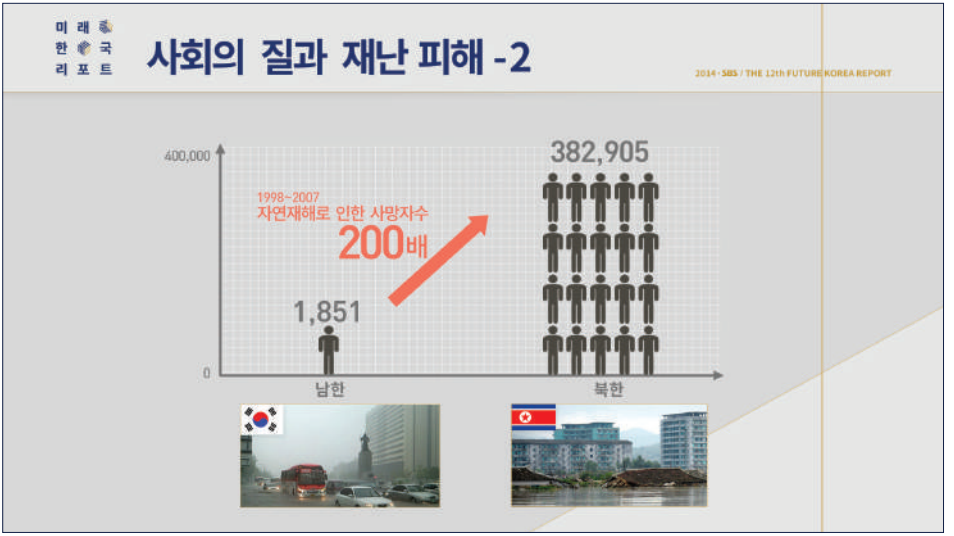


이러한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그동안 수년간 SBS와 함께 고민해 온 해답은
사회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에서는 재난을 예방할 수 있고,
설사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줄이고 빨리 복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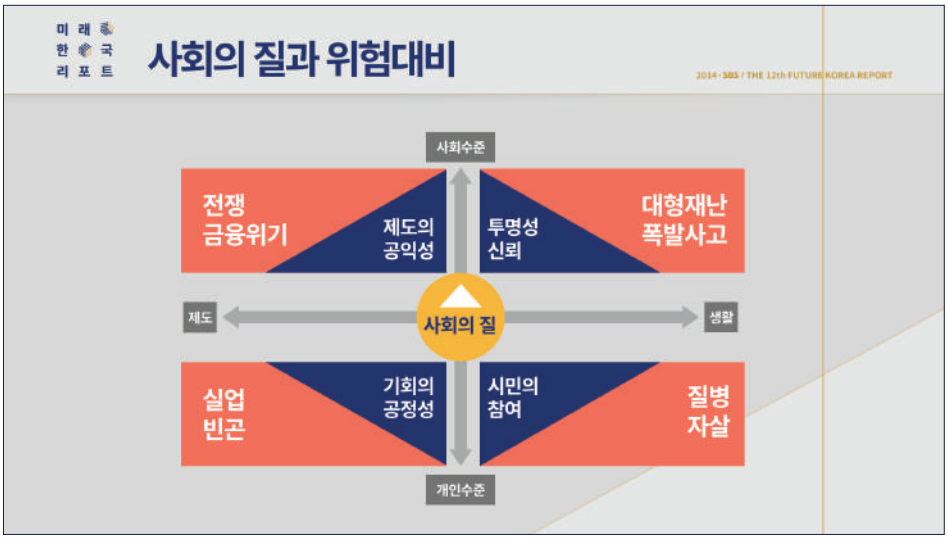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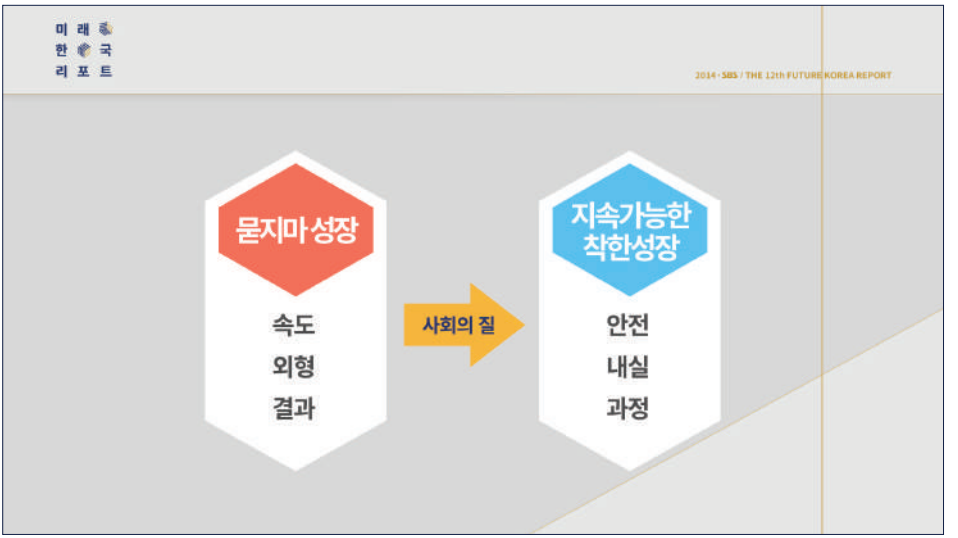
비슷한 지진 피해를 입었지만,
일본의 한신-아와지 대지진보다 중국 스촨성 대지진 피해자가 열배 이상 많았습니다.



한반도에 동일한 태풍이나 폭우가 지나갔는데도
남한보다 북한의 인명피해가 200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는 모두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자원 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중국이나 북한의 대응역량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재난이나 금융위기 같은 파국적 위험, 실업이나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려면,
그리고 인적재난을 예방하고, 불안을 줄이려면,
그 궁극적 처방은 사회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회의 질을 높이는 것은
제도의 공익성, 기회의 공정성, 규칙의 투명성과 신뢰,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회의 질을 높임으로 해서
이제는 속도와 외형,
그리고 결과를 중시하는 '묻지마 성장'에서
안전과 내실, 그리고 과정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착한 성장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UTURE KOREA REPORT

미래한국리포트
FUTURE KOREA REPORT
2014 · SBS

Presentation 3

지속가능사회의 조건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앞서 주제 영상과 발표에서 보셨듯이,
재난의 발생과 대처,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그 사회의 질 즉 social quality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선령 21년의 세월호는 일본에서는 운항할 수 없었는데도
어떻게 한국에서는 운항이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 완화가 항상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적정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라는
'공익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적과 정비부실, 청해진 해운의 비정상적 경영,
그리고 사태 직후 언론을 뒤덮었던 '관피아'라는 사적 집단은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구조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보여준
무능과 혼란, 비밀주의와 책임 떠넘기기도,
한국 사회의 '공개성'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유족들에게 인내와 망각만을 요구하다 보니,
유족들만이 외롭게 사태 해결의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시민 참여라는 '시민성'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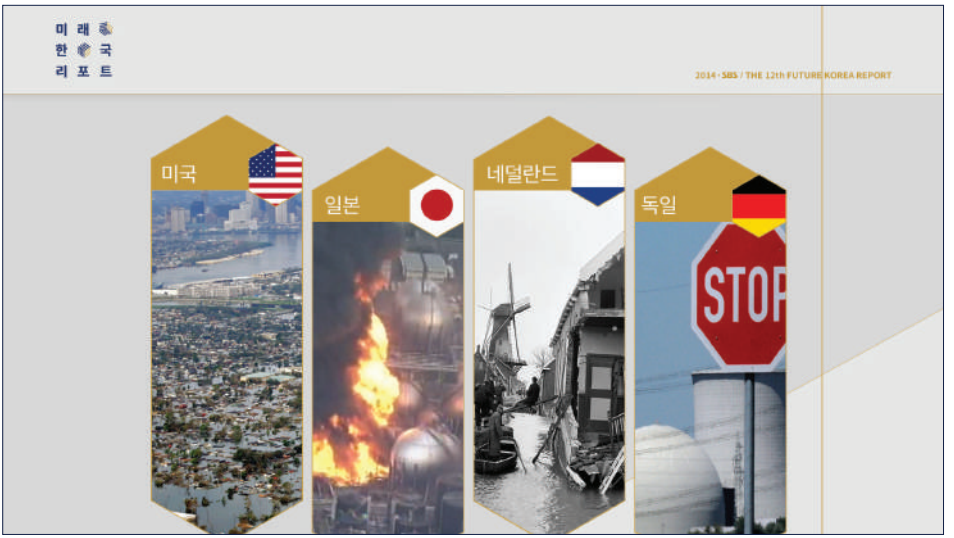


위에서 언급한 네가지,
즉 공익성, 공정성, 공개성, 그리고 민주적 시민성은
바로 공공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결국 세월호 사고라는 대형 재난의 근원에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태 발생 후 6개월 가까이 표류한 세월호 특별법은
공공성을 이끌어나가야 할 정치권이
공공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교통사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공공성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등입니다.



SBS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을 두 번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대형 재난을 겪은 다른 나라들와 비교해 연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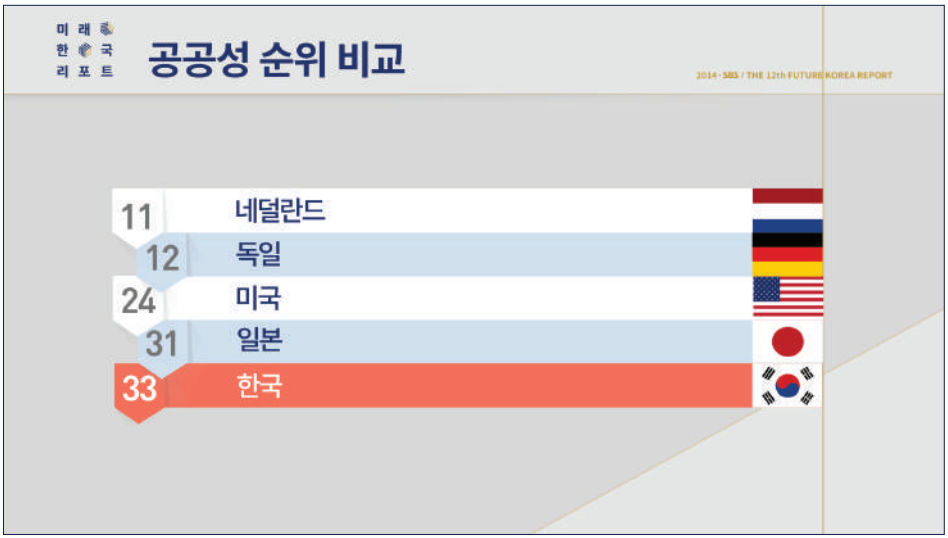
즉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겪은 미국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
1953년 대홍수 피해를 입은 네덜란드
그리고 원전 폐기를 선언한 독일 등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이들 나라가 사회적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거나 혹은 예방하고 있는지,
그러한 대처가 국가의 앞날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사회의 공공성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혹은 낮은지에 주목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공공성 수준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보시는 표는 OECD 33개 국가에 대해
23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계산한 공공성 수준입니다.



분석 대상 5개국 중 네덜란드가 11위, 독일이 12위,
미국이 24위, 일본이 31위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가장 낮은 3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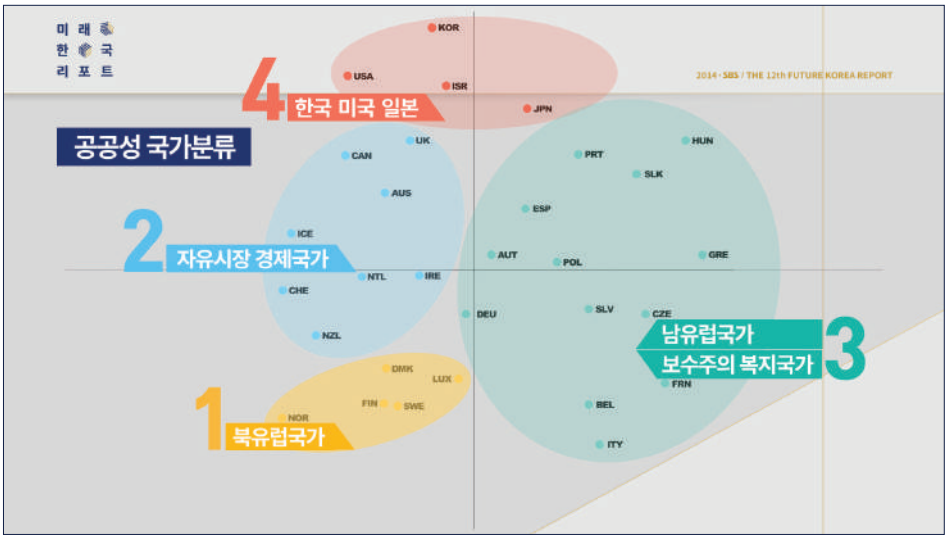
		공익성	공정성	공개성	시민성
11	네덜란드	12	8	14	14
12	독일	16	18	10	6
24	미국	32	31	8	5
31	일본	29	27	27	30
33	한국	33	33	29	31

공익성과 공정성, 공개성 그리고 민주적 시민성의 영역별로
다섯 나라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개국 중 공공성 순위가 가장 높은 네덜란드는 공익성과 공정성이 특히 높고,
공공성 순위가 두 번째로 높은 독일은 민주적 시민성과 공개성이 특히 높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두 나라의 재난 극복 과정에서 그 모습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미국은 공공성 순위가 전반적으로 낮고
특히 공익성과 공정성이 매우 낮은 편이지만,
앞서 영상을 보신 대로 공개성과 민주적 시민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은 카트리나 때 드러났던 문제들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공공성의 모든 영역에서 그 순위가 최하위권입니다.
그렇다보니 후쿠시마 사태 이후 지구 반대편의 독일은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
원전폐쇄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반면
일본은 오히려 원전재가동의 길을 가려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세월호라는 엄청난 재난 앞에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공성이 낮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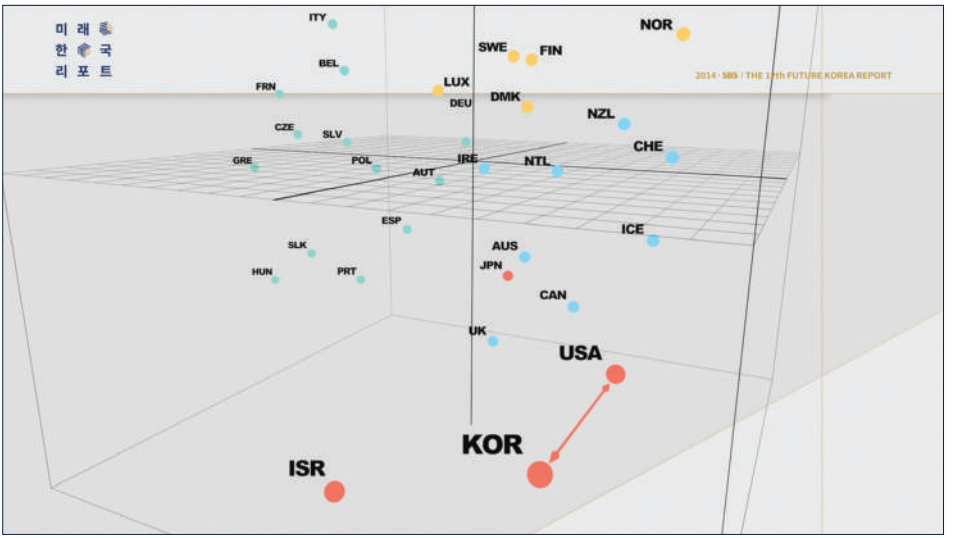
지금 보시는 것은 23개의 지표들을 이용하여
OECD 국가들의 공공성을 분류한 다차원 척도분석 결과입니다.
OECD 국가들은 크게 보아 네 가지의 공공성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별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를 차지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1그룹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캐나다, 호주 등의 자유시장경제 국가들이 2그룹으로 모여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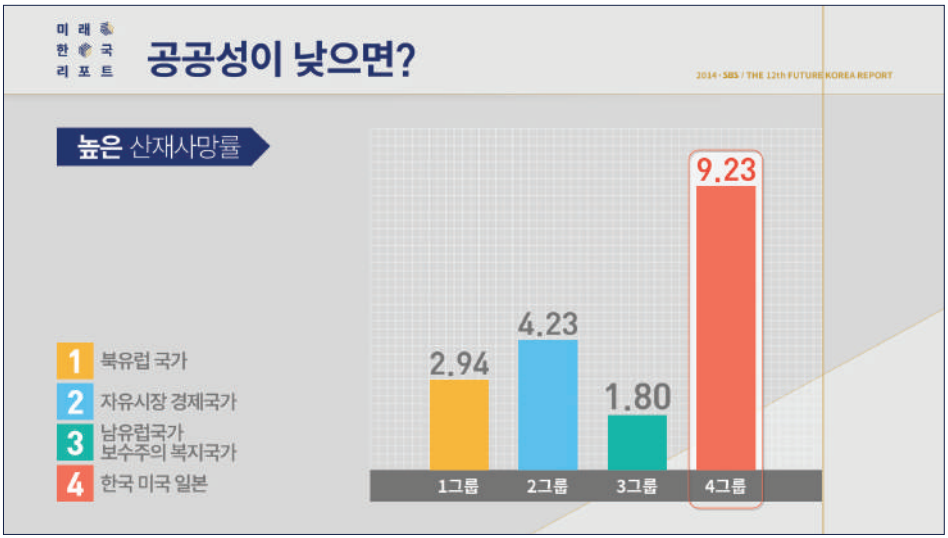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남유럽 국가들과
독일, 오스트리아 등 보수주의 복지 국가들이 3그룹을 이루고

한국, 일본, 미국 등이 마지막 4그룹을 구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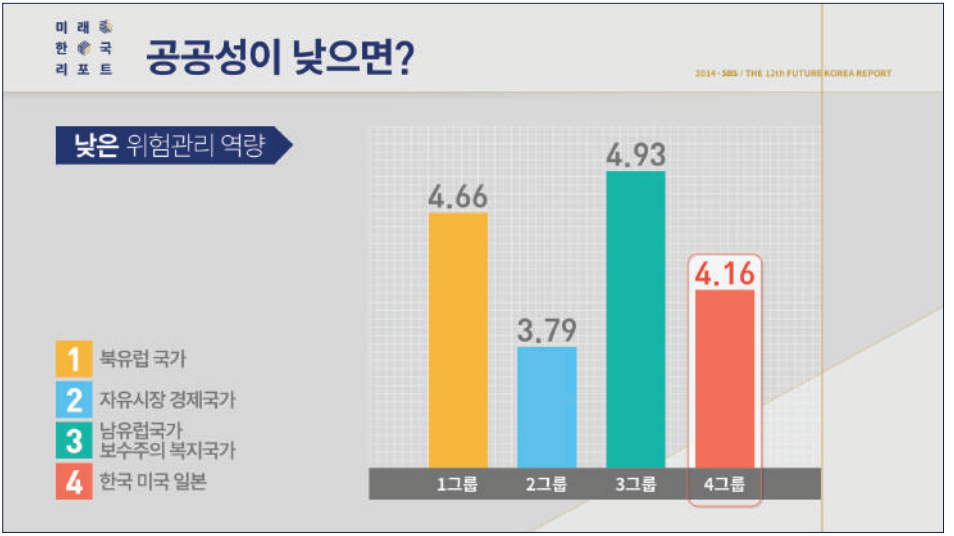


2차원 분석을 보면,
공공성이 낮은 그룹의 한국과 미국은 별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걸 3차원으로 분석해보면 좀 달라집니다.
보시는 것 처럼 한국과 미국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공공성이 낮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보면 공개성과 민주적 시민성은 높은데,
그 두 가지가 미국을 유지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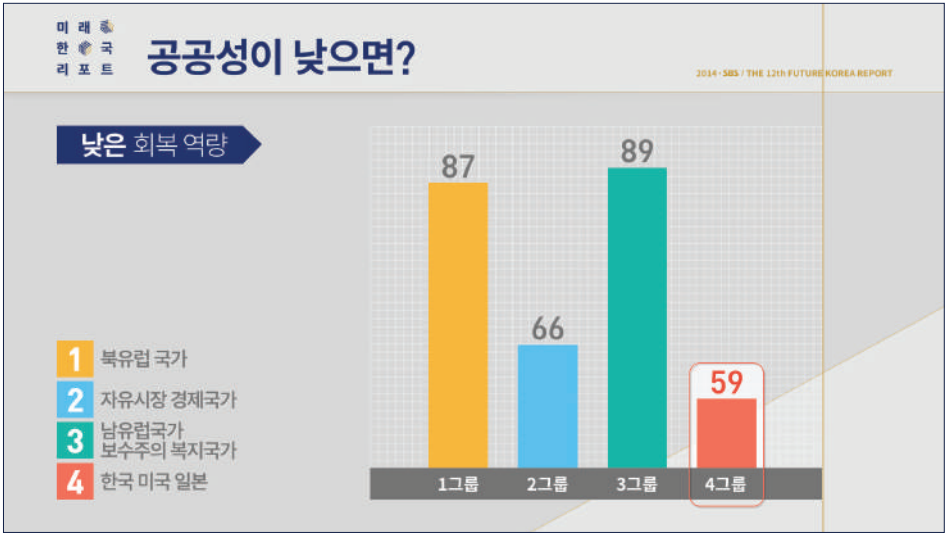


국가별로, 공공성이 낮으면 재난 대비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공공성이 낮은 4그룹은 보시는 것처럼 산재사망률이
다른 1,2,3그룹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10만명 당 9.23명입니다.



공공성이 낮은 국가들은 위험관리 역량도 낮았습니다.
위험관리 역량이란,
재난이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고 복구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것 역시 공공성이 높으면 역량이 높고, 공공성이 낮으면 역량이 낮았습니다.

2그룹이 가장 낮은 이유는 유럽의 재정위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씨랜드 사고 같은 학생들과 관련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고 복구하는
한국의 위험관리 역량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공성이 낮으면 재난 발생 이후
일상으로 돌아오는 회복역량도 매우 낮았습니다.
표에서 다른 1,2,3 그룹에 비해 4그룹의 회복 역량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세월호 사고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겨워하고 있다는 점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앞서 저희는 일본의 공공성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매우 낮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본마저도 작지만 의미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마을은 아직도 폐허상태입니다.
인적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 조성원 / SBS기자
"사고 이후 3년 반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주민 10만 명 이상이 지금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피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서는 방사능에 오염된 흙과 돌, 풀들을
처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수치가 기준 이하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 이도가와 카츠타카 / 후타바 마을 전 이장(피폭 피해자)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소중한 국민들이 건강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건강 검사를 할 수 있는 곳도 정부가 지정한 곳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돈을 모아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갑상선은 피폭됐을 경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정부 지정 병원에서는 방사능 피폭을 걱정한 갑상선 검사는
잘 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 후세 사키히코 / 후쿠시마 공동진료소 의사
"(체르노빌의 경우) 5밀리 시버트 이상 지역은 강제로 피난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0밀리 시버트까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인체 실험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측정 능력을 벗어나는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키가 작은 아이들이 주로 닿는 1미터 이하 지역의 방사능 측정이나,
집에서 먹는 식료품의 측정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 아라이 카츠코 / 시민단체 '후쿠시마 30년 프로젝트'
"지자체의 측정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3.11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사회는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그동안 경제발전에 가려져 왔던
정부 대처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고,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 오구마 에이지/ 게이오대 교수
"시민들은 항상, '마지막에는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아니면 '큰 조직이 뭔가 해주겠지'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원전사고 이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는 원전 재가동을 중단하라!”

2년 전부터 매주 금요일 총리 관저와 국회 앞에서는
대규모 시민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이제 정부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없고,
시민들이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이들은 특히 원전을 다시 가동하려는
아베 정부의 원전 정책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 모리타 료스케 / 시민집회 참가자
“국가가 안전을 담보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을 재가동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의 수준이 높고 공공성이 지극히 낮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는 여러모로 한국 사회와 닮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회는 이제 '시민'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조금씩 싹트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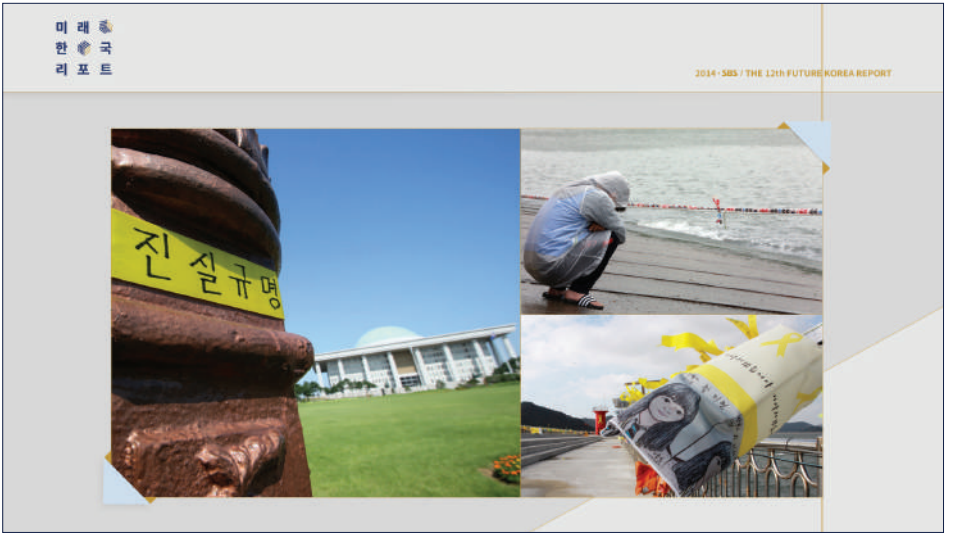
정부에 투명성과 합리적 판단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맡기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겁니다.

누가 일본 사회를 이끌고
누가 감시를 해야 할지
시민들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것이 적극적인 시민참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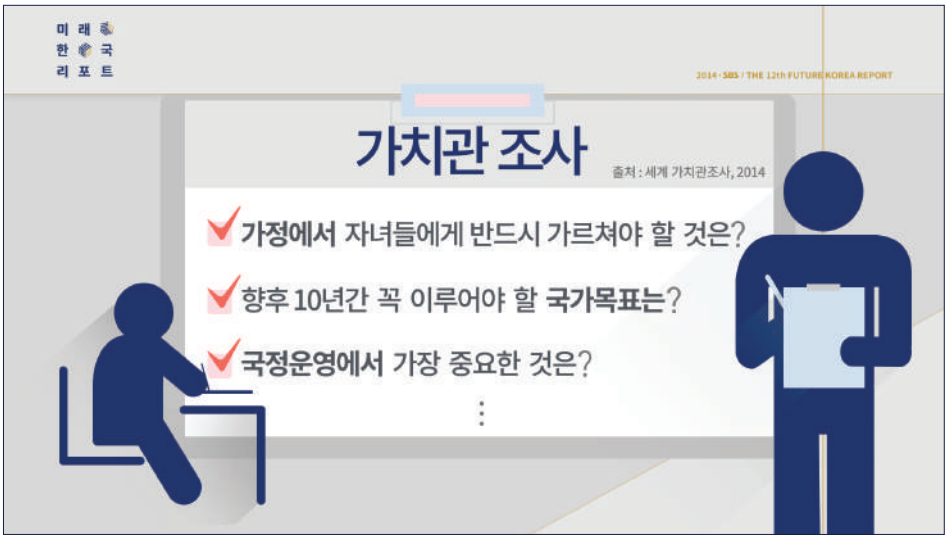
 # 코가 시게아키 / 시사평론가 (前 경제산업성 관료)
"3.11 이후 시민활동이 확실히 활발해졌습니다.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히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주제영상과 이재열 교수의 발표에서 보신 것처럼
재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외재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드러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일차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정치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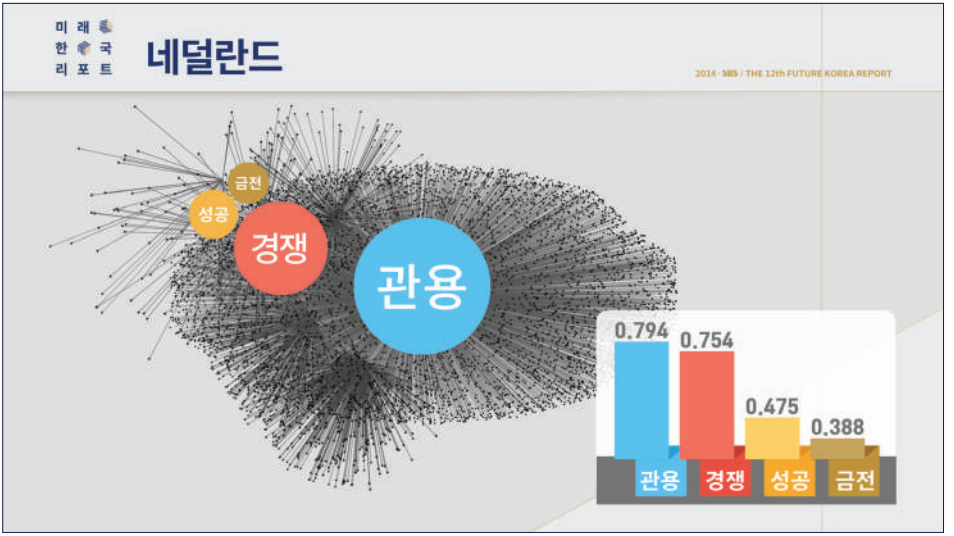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정부와 정치의 공공성 수준은
보통 한국 사람들이 가진 공공성 수준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를, 정치를, 바로 우리가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은 공공성이 결여된 사고방식으로부터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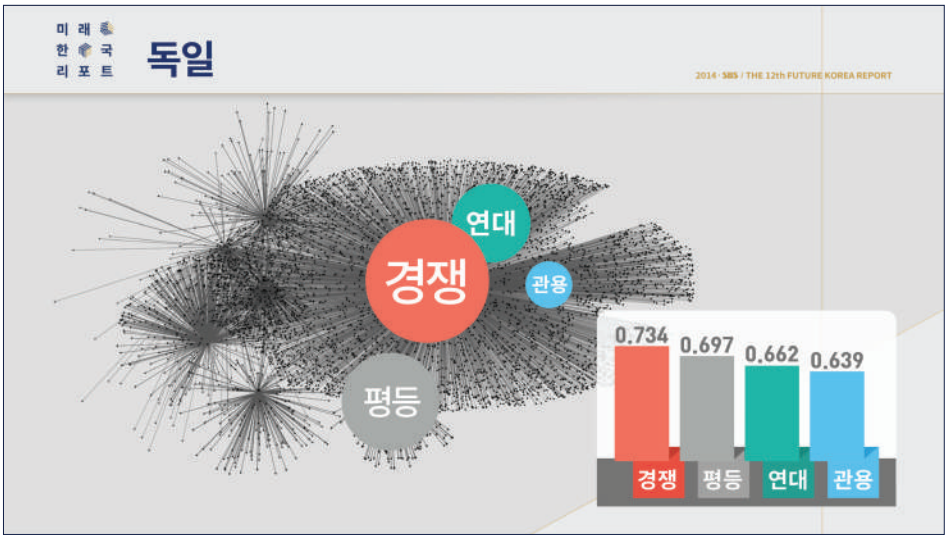
지금부터 분석대상 5개국 국민들이 가진 가치관의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가치관을 조사하는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각 국가별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형상화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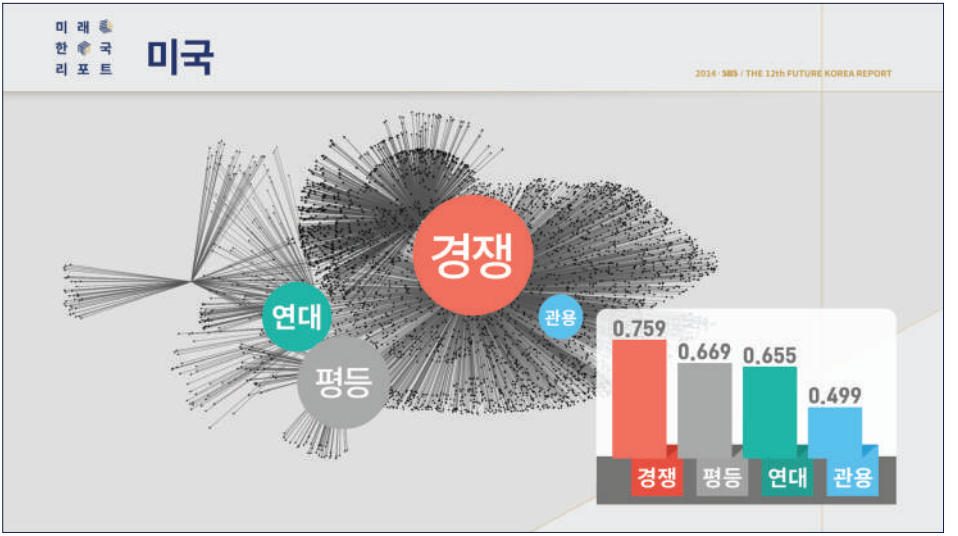


먼저 5개국 중 공공성 순위가 가장 높은 네덜란드입니다.
중앙에 있는 가치는 그 나라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이고
주변부로 갈수록 그 가치관의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관용과 경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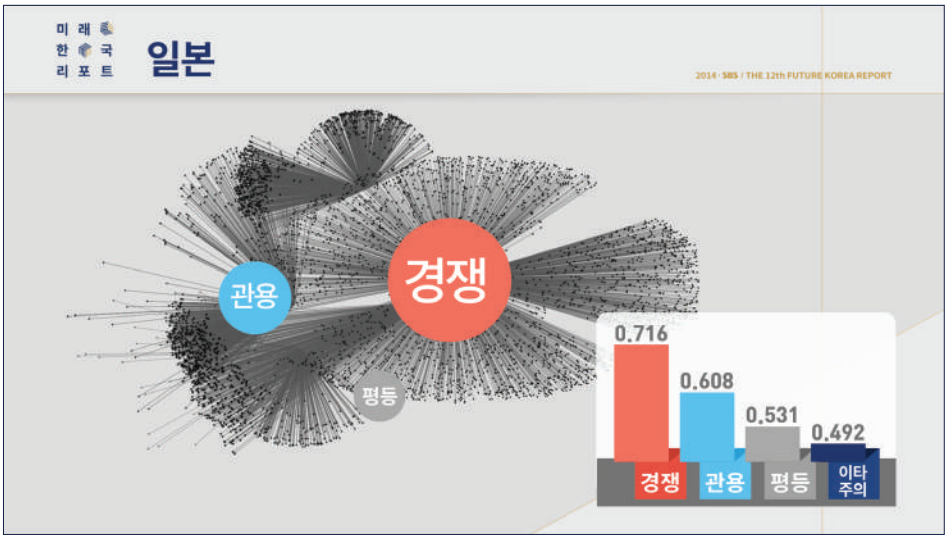
중앙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관용이고
경쟁은 '금전' '성공' 등과 함께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성 순위가 두 번째로 높은 독일입니다.
독일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경쟁'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만
바로 뒤를 이어서 경쟁을 보완해주는 가치관들인
'평등' '연대' '관용'들이 포진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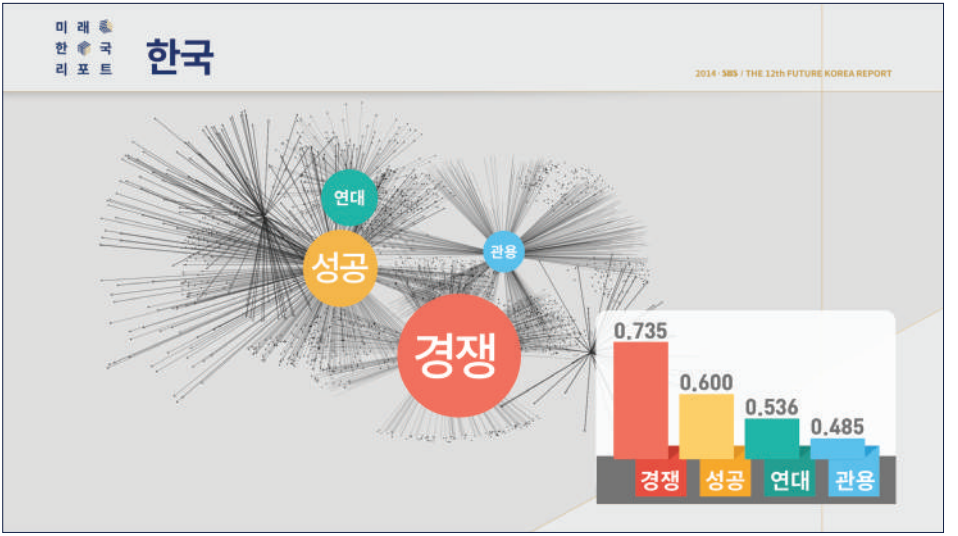


자유시장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진 미국은 어떨까요?
역시나 '경쟁'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등', '연대', '관용'이 바로 그 뒤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경쟁할 땐 경쟁하더라도
 당신이 침몰하는 순간이 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공동체적 가치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는 경쟁의 이점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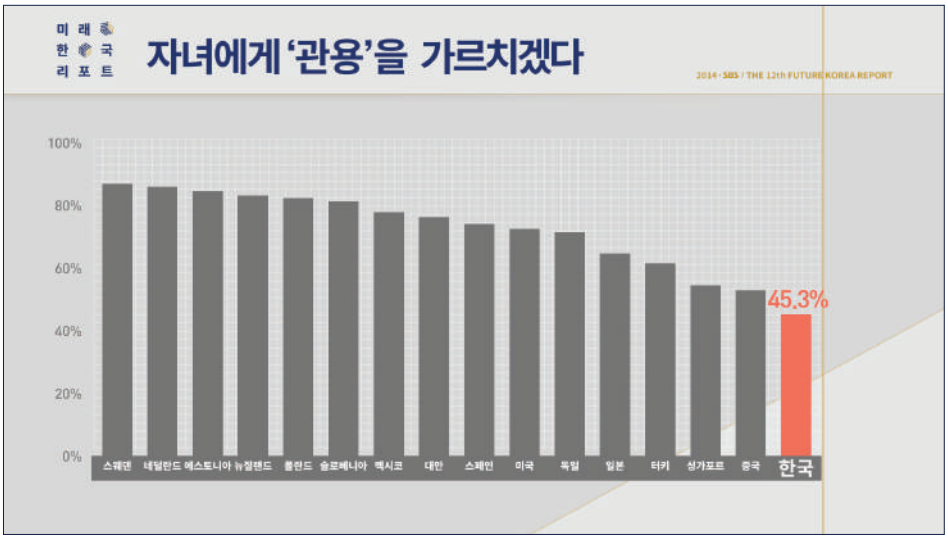


다음으로 공공성 순위가 가장 낮은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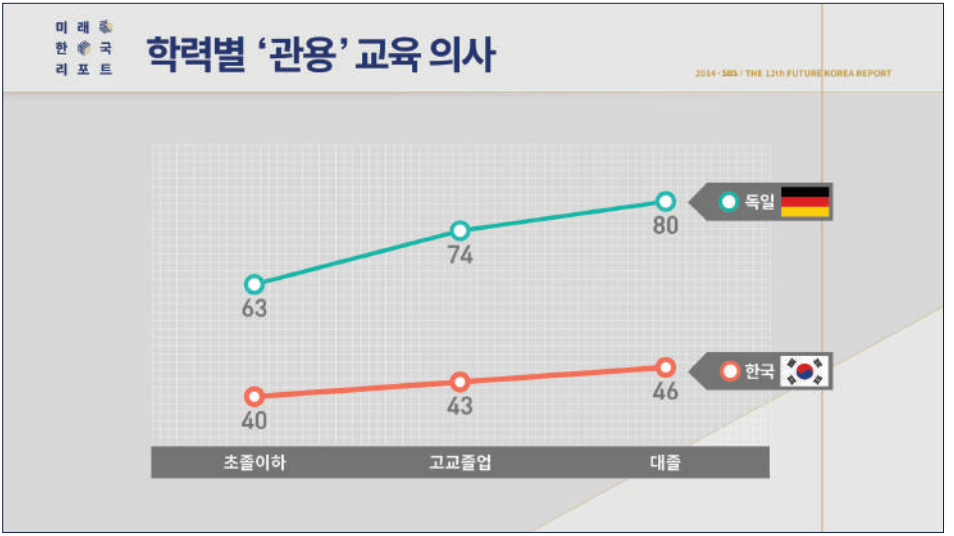
두 나라에서 모두 압도적인 가치관은 '경쟁'입니다.
일본의 경우 '경쟁'의 뒤를 이어 '관용'과 '평등'이 자리 잡고 있지만
이들의 중요성은 '경쟁'에 비해 현저하게 작습니다.
앞서 언급한 네덜란드, 독일과 다른 점입니다.



한국인들의 가치관은 어떨까요?
'경쟁'의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바로 뒷자리를 '성공'이라는 가치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관용'이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중요성은 '경쟁'과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타인에 대한 관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62개국 가운데 꼴찌였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교육 수준이 높아도
관용을 가르치겠다는 응답은 낮게 나왔습니다.
공공성이 결여된 한국 사회는 모두가 알아서 자기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각자도생'의 사회가 되었다는 방증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공공성이 결여된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 것일까요.

저의 발표를 열었던 세월호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의 공공성이 높았다면
과적이나 정비부실, 비정상적 경영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공공성이 높았다면
관피아의 비리는 투명하게 드러났을 것이고 정부기관들은
책임을 떠넘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공공성이 높았다면
정치인들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이렇게 늦추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국 사회의 공공성이 높았다면
시민들은 편을 나누어 손가락질 하거나 귀찮다고
빨리 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우리는 세월호에 탔던,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과, 이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래한국리포트
FUTURE KOREA REPORT
2014 · SBS

Presentation 4

사회적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녕하십니까?

앞선 발표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재난의 관계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는 공공성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즉 신뢰와 부패, 사회적 합의 등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경제성장을 하려면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많은 교육을 시키며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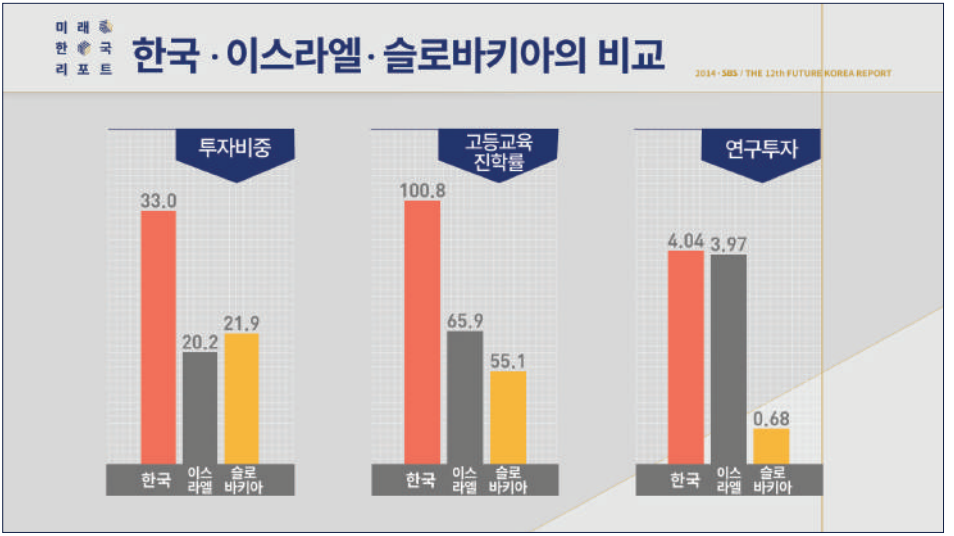
그런데 사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소득대비 투자율과 연구투자지출의 비중,
그리고 고등교육 진학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반드시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성장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1인당 GDP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최근의 경제위기에 직접 타격을 받지 않은 국가인
이스라엘, 슬로바키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들 국가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각각 36,000 달러, 17,000 달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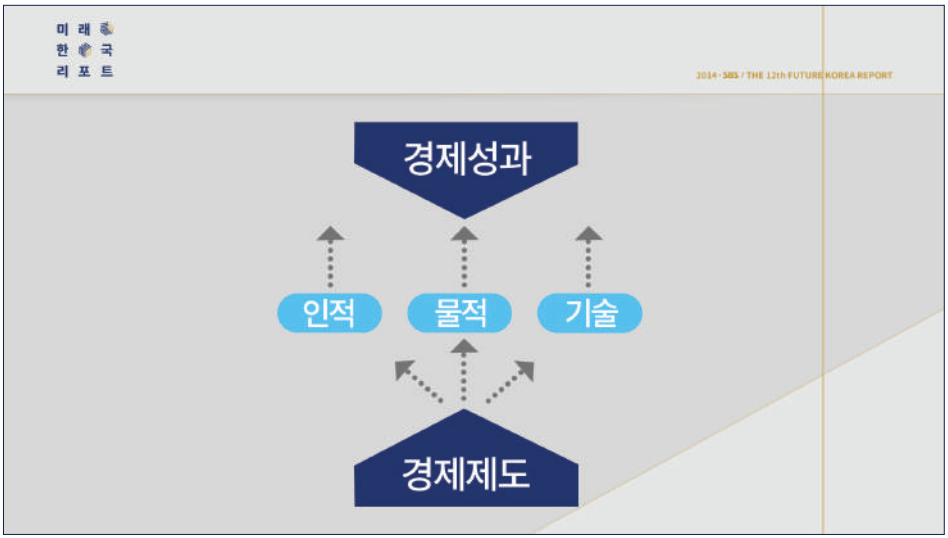
그리고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3.5%, 이스라엘은 4.2%, 슬로바키아는 3.1%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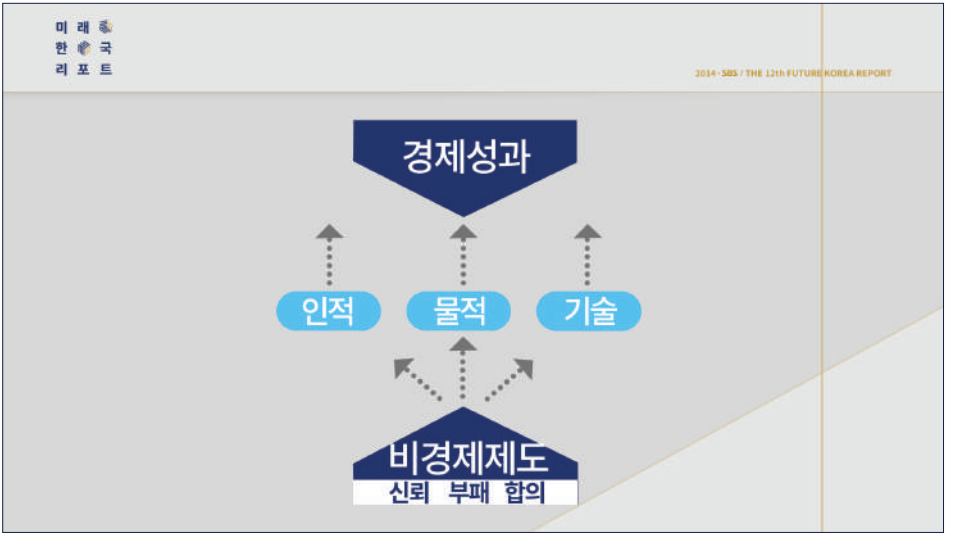
그런데 2011년 자료를 보면 한국은
물적, 인적, 기술개발 투자 모든 지표에 있어서 이 세 나라 보다 높습니다.

특히 슬로바키아 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장률은 이스라엘에 뒤지고
슬로바키아에 비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의 투자, 교육, 기술개발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경제성과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요인들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최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 요인으로서
신뢰, 부패,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강조해 온 투자, 교육, 기술 등은
성장의 근본 요인이 아니라 매개 요인,
즉 근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성장의 경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신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까요?

예를 들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약하다면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 여러 증빙 서류를 요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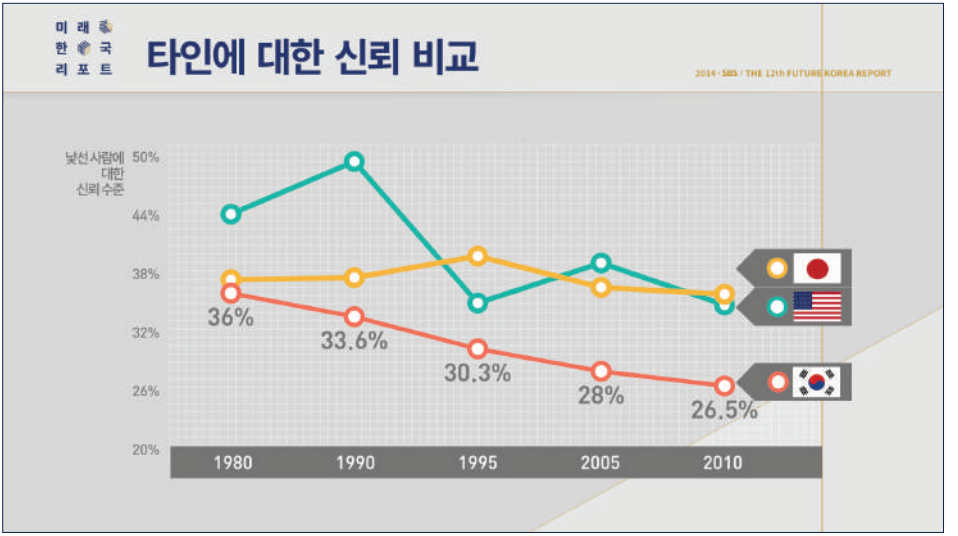


이런 저런 서류를 준비하느라,
보다 생산적인 데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신뢰가 매우 낮으면 경제 거래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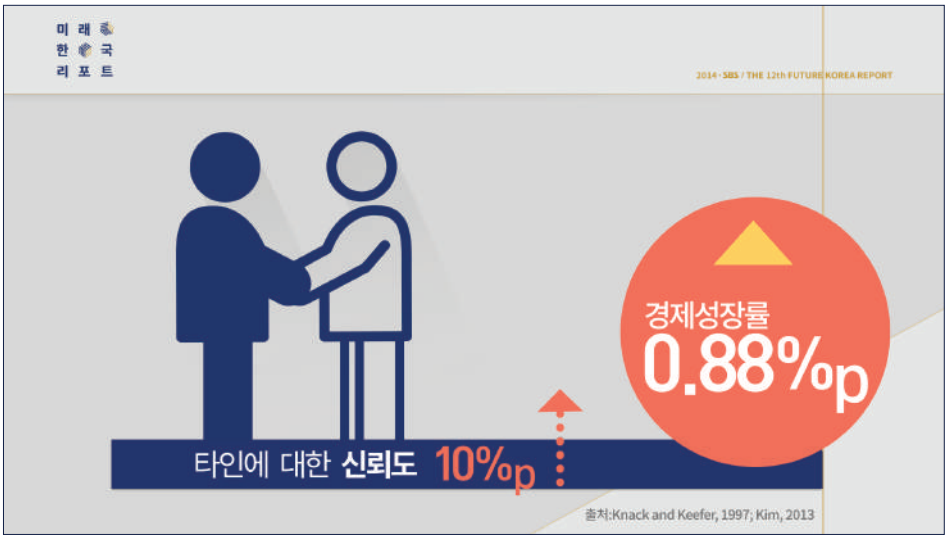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뢰가 높은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기업가들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업가들이 많으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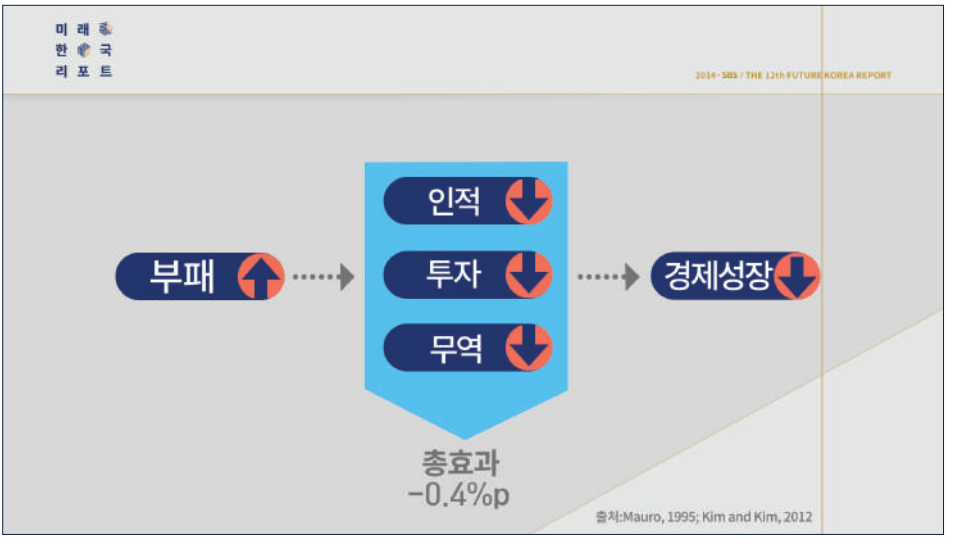
한국의 신뢰 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세계가치관조사에서 한국의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정도는
2010년 26.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본과 미국은 한국 보다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인의 신뢰 수준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의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은
80-90년대 30%대에서 그 이후 20%대로 하락했습니다.



신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결과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10% 포인트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88% 포인트 상승합니다.

이는 거래비용이 줄고
사람들의 시간과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만약 한국의 신뢰수준이
일본이나 미국의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8% 포인트 추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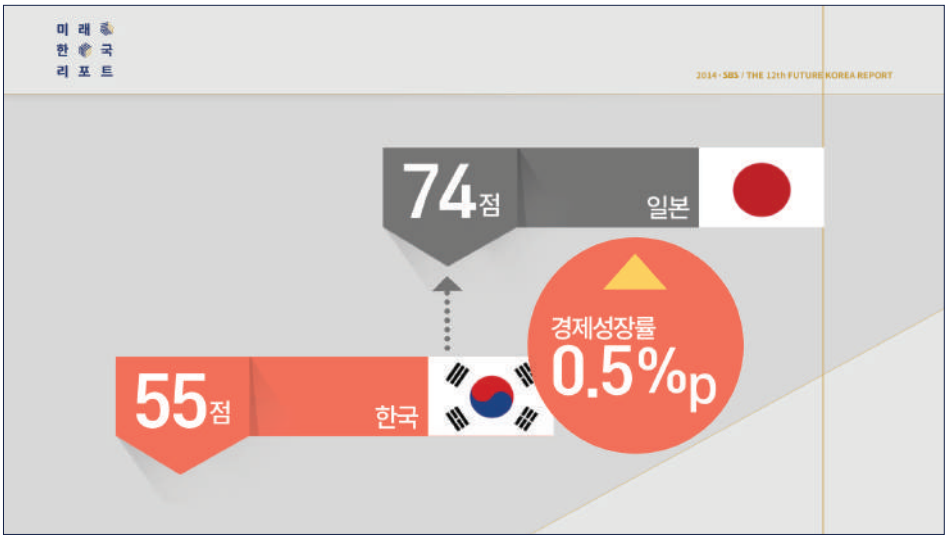


둘째,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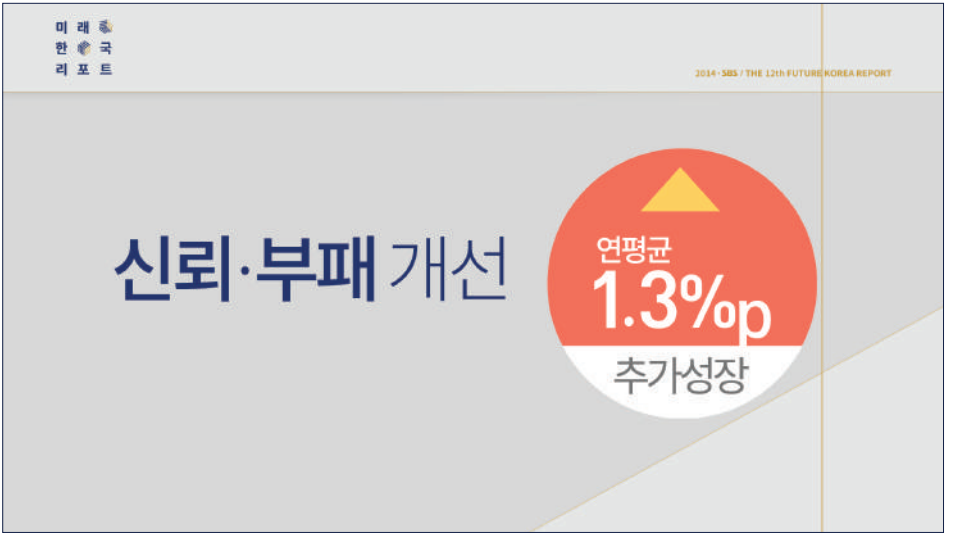
부패는 투자와 무역, 교육 지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부패가 1단위 변할 때 연평균 성장률은 0.4% 포인트 변합니다.
기업하려는 사람들이 관료의 부패에 시달리면 기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절대 기업하지 말고 관료가 되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인당 국민소득을 고려할 때 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입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투명도 순위가
지난 15년 넘게 계속 세계 40-5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의 지수로 측정한
투명성 수준을
55점에서 일본 수준의 74점으로 높인다면
경제성장률은 0.5% 포인트 상승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이 신뢰와 부패를
공공성 순위가 비슷한 일본 수준으로 개선시킨다면
한국경제는 연평균 최대 1.3% 포인트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가 아니라 4.3%가 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8만개 가량 늘어날 수 있는 성장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구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사회주의 경제의 붕괴 이후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합의가 잘 이루어진 국가는 개혁적인 정책을 잘 도입하여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는
시간만 허비하면서 경제가 크게 침체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체코나 헝가리는
체제 이행 이후 GDP가 15% 이내 하락한 이후 바로 성장한 반면
사회 갈등이 심했던 러시아는 8년 동안 GDP가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러시아가 체코만큼 시장경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으면
러시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5% 포인트 증가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도 높은 사회 갈등으로 인해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조세와 복지 문제, 교육 개혁
어느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성장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와 투명성이 높고 사회통합을 이룬 국가는
어떻게 사회적 재난과 경제 위기를 극복했는지
네덜란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하원 의원 한 텐 브루커씨
국회 상임위원장이지만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벌써 8년 째입니다.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창재 / SBS 기자
"네덜란드 국회의사당입니다.
의사당 곳곳에는 이처럼 의원과 직원들의 자전거가 보관돼 있습니다."

의원 사무실 넓이도 우리나라의 절반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보좌관과 책상을 마주하고 일을 합니다.
검소하고 청빈하게 사는 것이 생활화된
이 나라에서는 부정부패를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한 텐 브루커/하원의원
"제 출장기록은 모두 공개됩니다.
모든 비용 또한 나라, 의회, 국민을 위해 쓰인 것이므로
필요할 경우 그 내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부패인식지수는
177개국 중 8위를 기록해 말 그대로 투명한 사회입니다.

이처럼 깨끗하다보니
네덜란드의 정부 신뢰 수준은
13위로 미국이나 독일보다 높습니다.

 # 헤몬 버닝/ 암스테르담 시민
"(네덜란드는) 좋은 사회입니다. 자유롭고요. 만족스럽습니다."

 # 콘스탄스 / 암스테르담 시민
"정치인들에게 투표합니다. 믿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정부 신뢰는 정부 정책지지로 이어져
네덜란드에서 10년 주기로 노사정을 통한 사회적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역시 활발합니다.
92살 폰 액 할머니를 비롯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양로원 밖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매주 이 곳을 찾는 대학생 자원 봉사자 덕분입니다.

 # 잉헤보르흐 판 데어 판 / 대학생 자원봉사자
"네덜란드가 부자 나라인데도
외롭고 혼자서는 밖에도 나갈 수 없는 노인분들이 많다는 점이 안타까워요."

사회 봉사의 배경에는 사회 투명성이 있습니다.
사회가 깨끗할수록 남을 도우려는 이타주의 성향과 사회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회의 투명성과 참여는 네덜란드가 재난 등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됐습니다.



지난 1953년 대홍수로 천 8백 여명이 희생되고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해 국가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덜란드는 그 때부터 델타 프로젝트를 가동해
라인강 하류 등 델타 지역에 만 6천 4백여 킬로미터의 제방을 건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시민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등
높은 시민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 예룬 바르너르 / 바헤닝헌 대학
"현재 네덜란드는 탄탄한 시민 사회가 있으며
조직화된 교회 집단과 비교회 집단 또한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교류합니다."

70~80년대 초 네덜란드는 물가와 임금 상승,
과도한 복지 지출로 이른바 '네덜란드 병' 이라는 경제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하지만 1982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 인상 자제와 일자리 분배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위한
바세나르 협약을 맺었습니다.



 # 모런 /노동재단 사무총장

"우리는 주로 협상을 합니다 대화를 하죠. 필요하다면 밤낮도 가리지 않아요.
절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덕분에 네덜란드는 남한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7천 달러,
무역 규모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5위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낮은 신뢰, 높은 부패, 높은 사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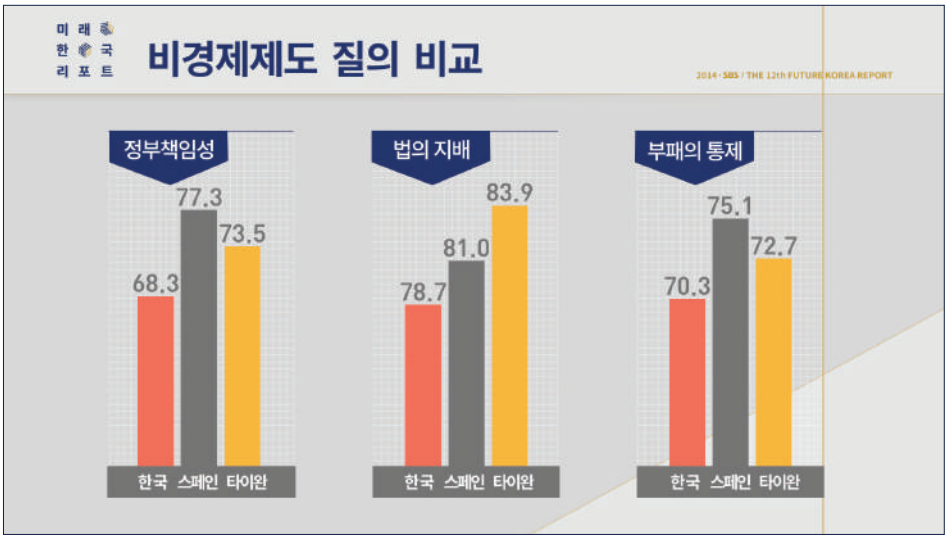
신뢰, 부패, 갈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근원적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던
경제적 요인 이외의 비경제적 원인을 봐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서로 연관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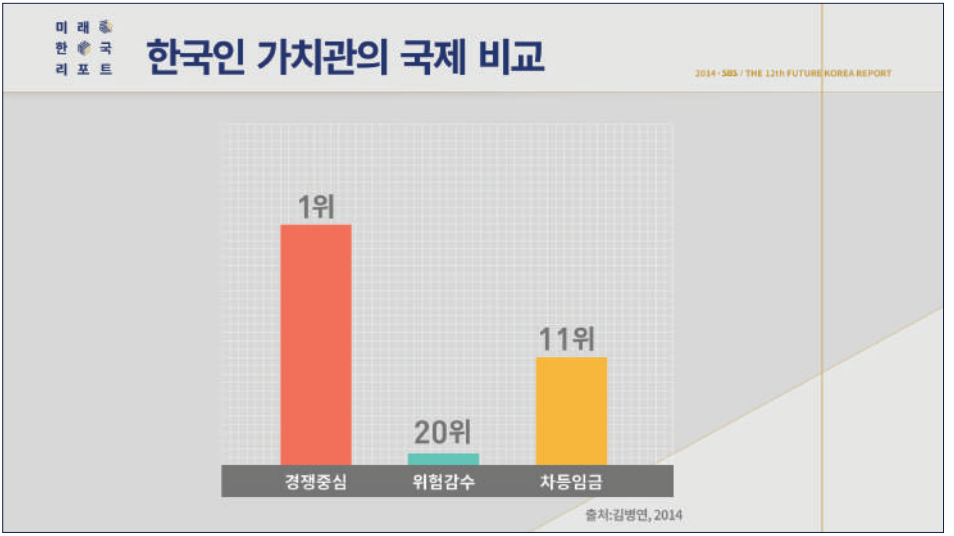
첫째는 제도의 부정합성입니다.
한국의 제도는 하이브리드, 즉 잡탕입니다.
어떤 제도는 오래전 우리 전통 인식에 기초해 있고
어떤 것은 경제개발시대에 도입된 것,
어떤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온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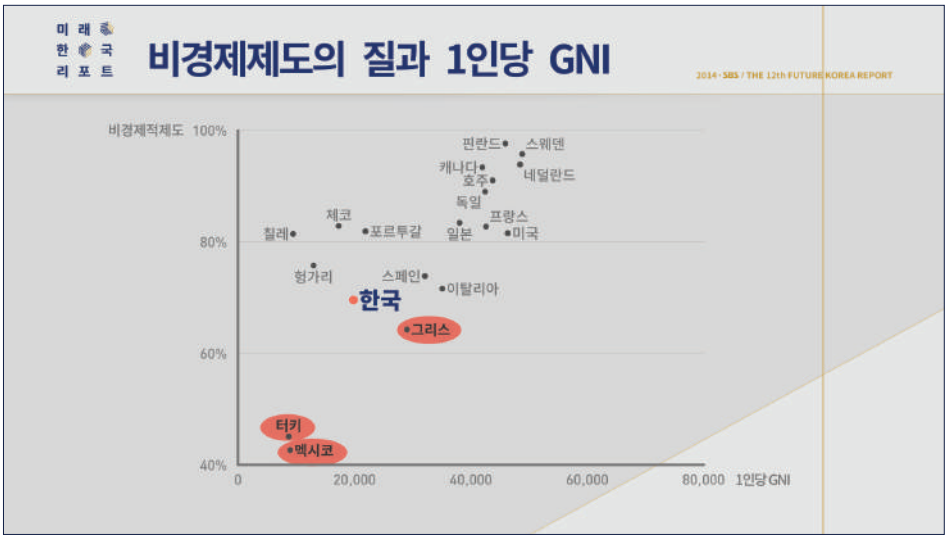
이것들이 일관성 없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부패와 갈등, 불신의 원인이 됩니다.
서로 보는 시각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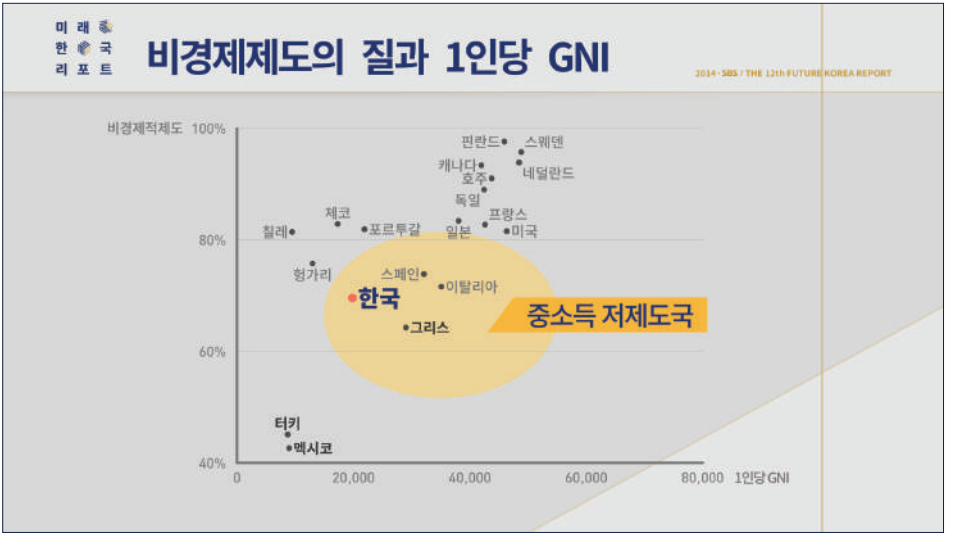
객관적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의 비경제 제도의 질은 낮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부족합니다.
소득이 비슷한 국가인 한국과 스페인, 타이완
세 나라의 비경제제도의 질을 비교해 보면
6개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타이완보다 낮은 수준이며,
스페인과 비교해서는
정부책임성, 법의 지배, 부패의 통제의 지표가 낮습니다.



둘째는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실제로 한국인은 OECD 국가 중
가장 비정형적이며 혼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비교 대상 20개국 중에서
가장 경쟁 지향적입니다.
그러면서 안전한 직업을 선택하려는 성향은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20개국 중에서 위험감수정도는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서 차등적 임금 지급은 싫어하는 편이어서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런 결과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비경제제도의 질이 낮은 국가는
터키, 멕시코, 그리스 등에 불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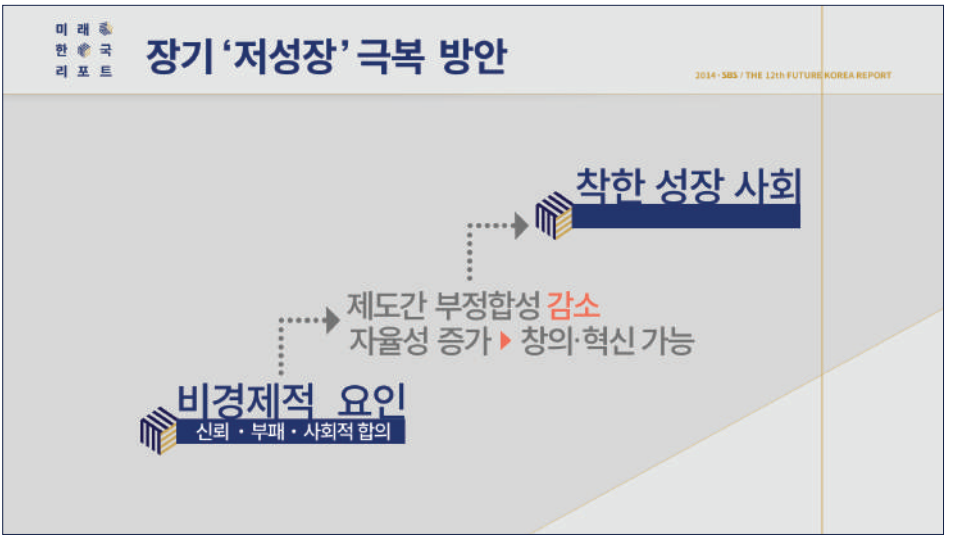


특히 우리와 같이 중간 소득이면서 제도의 질이 낮은 국가인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모두 재정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질과 정합성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착한성장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기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장기 저성장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
우리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신뢰와 부패, 사회적 합의와 같은
이른바 비경제적 요인의 가치에 대해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도와 제도간의 부정합성이 줄어들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사라지면서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정부 주도의 경제와 사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굴레와 환상에서 벗어나야
우리 경제도 살아나고 우리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UTURE KOREA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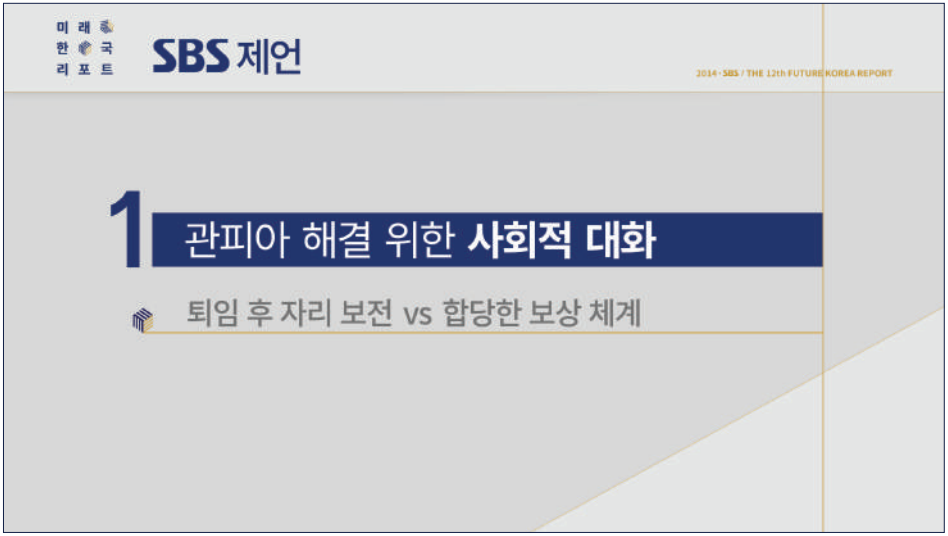
미래한국리포트

FUTURE KOREA REPORT

2014 · SBS

Presentation 5

SBS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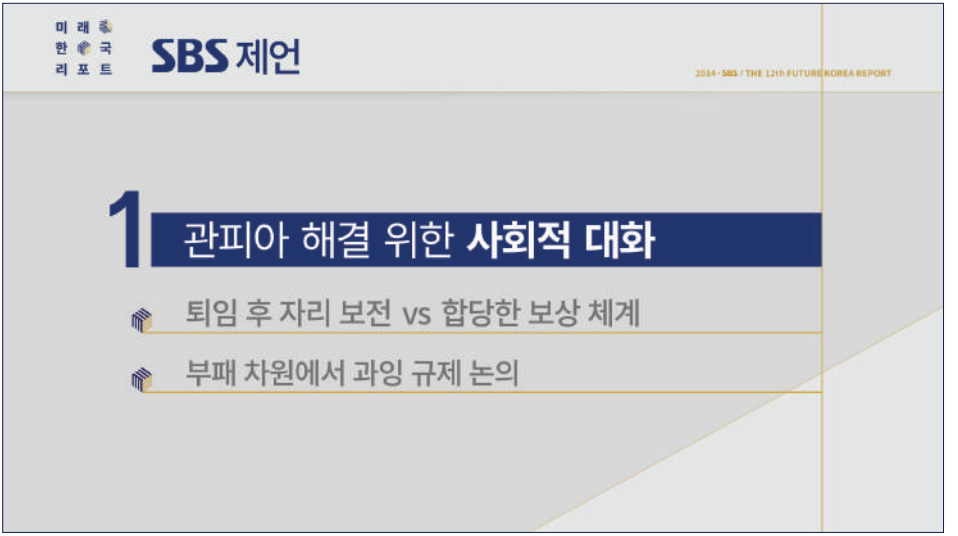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놀라셨을테고
더 이상 참사를 겪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위해
공공성을 높여야한다는 보고에 공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공공성, 어떻게 높여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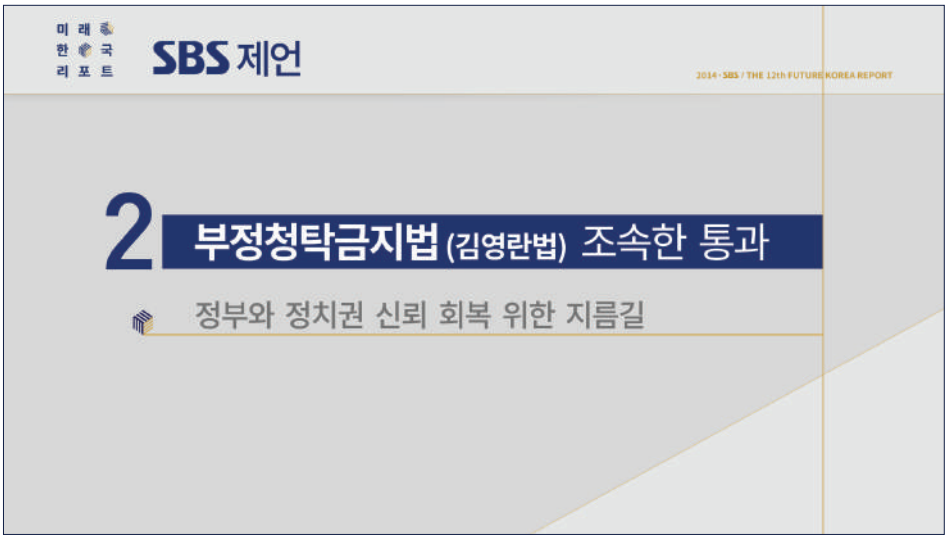
지금부터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SBS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관피아는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공직자는 공복이니까 모든 개인이익을 희생하고
무조건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할 것인지,
재직기간에 수고하면 퇴임 후 자리를 보전해주는
지금과 같은 관피아 방식을 부분적으로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합당한 보상 체계를 갖추고 비리를 엄벌할 것인지,
그 방식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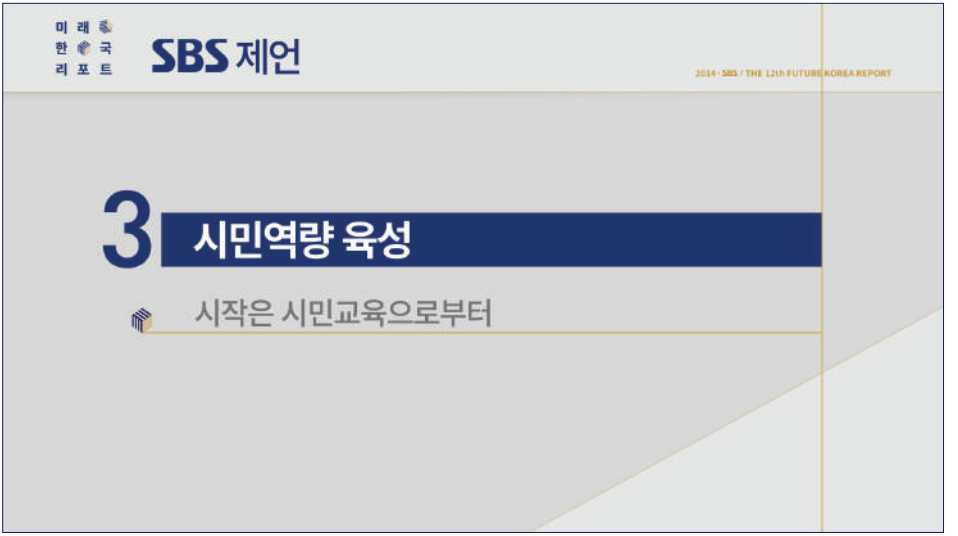


특히 과잉 규제는 관피아 문제 해결 차원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정작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뒤섞어 버리게 되므로,
규제의 총량을 줄이는 것을 선(善)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악(惡)으로 여기는 착시현상을 낳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둘러싼 고무줄 같은 규제는
부패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차단하기위해 만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지요.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만이 땅에 떨어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과 전남, 충남, 성남시 같은 지방정부에서
'지방판 김영란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 역량을 키울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성을 담보할 주체는 국가만이 아닙니다.
시민도 중요한 주체입니다.
공적인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나 태안 기름 유출사고 때 자원봉사 행렬 기억하시죠?
시민 참여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보다 지속적인 사례를 보시죠.
울산에서는 예산 요청이 들어오면 시민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보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젠 아예 2011년에 주민들의 예산 심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까지 개정했습니다.
시민 참여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시민이 믿는 예산안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 장익수 /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주무관
"미처 공무원들이 파악하지 못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해결함으로써
구청과 주민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IT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앱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4만 명이 넘게 다운받았습니다.

 # 강윤모 / '우리 동네 후보' 어플 개발자

"확실히 유권자분들이 많이 모여서 많이 요구를 하시고 참여율을 높이시면
그럼 후보나 정치인 분들이 따라오실 수밖에 없는 것인 걸
다시 한 번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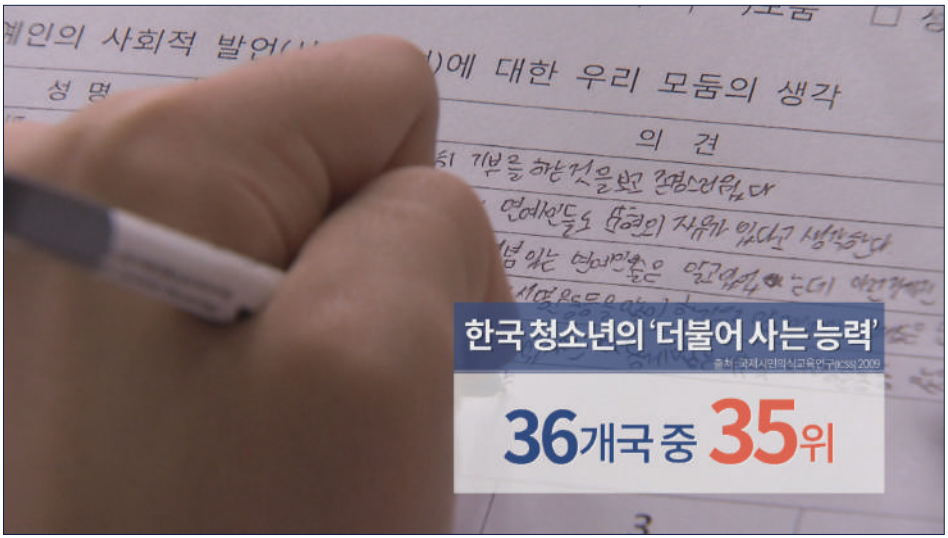
시민 참여를 높이려는 일은 사실 시민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신뢰, 관용, 사회적 협력, 연대, 참여,
이런 시민 문화를 익히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시민민주주의 원조인 유럽에서는 다양한 시민교육, 참 열심히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교육 모습입니다.
국제 시민의식교육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은 0.31점으로
조사대상 36개 가운데 35위, 꼴찌에서 둘째입니다.

시민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면 학교가 나서야 합니다.
시민의 책임과 참여를 가르쳐야합니다.



 # 장경훈 / 당동 초등학교 교사

"이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려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거든요."

여기까지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SBS 제언입니다.

미래한국리포트
FUTURE KOREA REPORT
2014 · SBS

Comment

강평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현대사회는 고도의 위험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국가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없고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이런 현상에 맞도록 국가가 전반적으로 기능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가 원래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도 원래의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적이익이 사적이익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만이
국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문제는 이미 시기가 굉장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공직사회의 윤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김무성입니다.
오늘 '한국사회 재설계'를 주제로 한 'SBS 미래한국 리포트'의 발표 내용은
너무나 알차고 감명 깊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있었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얘기했고,
여기 계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는 '국민 대타협'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SBS가 발표한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훨씬 더 알찬 연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리포트였습니다.

저는 '재난이 발생할 때 누구 탓인지 희생양만 찾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는
이재열 교수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진정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둬야할 것입니다.

지난 7일 세월호3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제가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을 찾아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부를 믿고 인내심으로 묵묵히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후속조치도 잘 마무리해
세월호의 아픔과 눈물이 재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진 교수님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조건'으로 경쟁과 관용의 적절한 조화를
강조하셨는데 이는 제가 말씀드렸던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나라가 어려울 때 노동자-사용자-정부가 고통 분담으로 대타협을 이뤄냈던
네덜란드와 독일의 사례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장덕진 교수님의 말씀대로 네덜란드와 독일은 경쟁도 중요하지만,
관용과 연대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경쟁사회로 알려져 있지만, 공동체적 가치도 중시합니다.

반면 저희 대한민국은 경쟁과 성공만 너무 강조하다보니,
부끄럽게도 타인에 대한 관용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정치권부터 대화와 타협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크게 반성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병연 교수님은 경제성장을 위해 '신뢰, 부패,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 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나 소홀히 한 게 사실입니다.
흔히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을 말하는 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충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도의 증가가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김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저희 정치권부터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후진국형 대형 참사였던 세월호의 아픔이 저희에게 가르쳐준 큰 교훈이 있다면
'안전은 비용이 들고 불편하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빈틈없이 하나하나 점검하고 조그마한 사회규칙도 꼬박꼬박 지켜나가는 것.

사회 구성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나 아닌 우리 모두의 공적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혁신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성을 중시하고 시민교육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오늘 SBS 미래한국리포트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선진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SBS 윤세영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를 달성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민주화를 성취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100년, 200년이 걸렸던 것을 우리는 앞만 보며 압축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압축성장의 그늘에서 독버섯처럼 번지는 각종 부작용이 창궐한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더 이상 빨리빨리, 대충대충으로는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보여준 대한민국호 자체의 대참사였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입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국가개조란 말을 써가며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는 데
전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호에 대한 경종과 변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지난 대선에도 있었습니다.
국민은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시대정신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치권은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바로 그 시대정신을 잘 구현할 수 있다고,
국민에게 앞 다퉈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은 박근혜 당시대선 후보가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 더 잘 준비되고,
더 신뢰가 간다고 믿고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만 2년째 되어가는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제민주화 대신에 초이노믹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이노믹스는 20세기적 발상입니다.
사회적 양극화만 키우고, 고용 없는 성장만 지속하는 경제정책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21세기형 경제민주화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인 것입니다.

스웨덴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코 소득수준이 높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913년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전까지만 해도
100만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만 했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교육, 보육, 의료 등 인적자원 개발에 쓰이는 재원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스웨덴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 이분법으로 갈려서
서로 죽기 살기 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보수 쪽이 지키자는 것이라면, 진보 쪽은 바꾸자는 것입니다.
보수 쪽이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자는 것이라면,
진보 쪽도 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보가 현재의 체제를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로 바꾸자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들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 지키자는 쪽과 바꾸자는 쪽이
양 날개 같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양 극단으로 갈라져만 있다면 서로 다투면서 공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 사익과 공익 모두 소중한 가치입니다.
성장과 분배, 진보와 보수 또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빨리 혼자 달려 왔습니다.
이제는 멀리 보며 함께 가야 합니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엔 혼자 다 하려 했고, 그래서 독점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서로 공유할 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골고루 잘사는 사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됐을 때,
우리 모두가 더 풍요롭고 살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언제나 시대를 선도했던 SBS가 마련한 좋은 말을 하는 이런 자리,
그리고 하시는 교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 속 깊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젠다(Agenda) 설정에 서로서로 참여하고,
전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 래
한 국
리 포 트
FUTURE KOREA REPORT

SBS 미래부

신경렬 이사
박수언 부국장
이창재 부장
조성원 차장
정호선 차장
이병희 차장
감도경 차장
주민규 PD
김준용 PD
노영실 작가
송지은 작가
문상훈 디자이너
이정현

SBS 편성팀 제작리소스파트

SBS A&T CG

제12차 미래한국리포트 “한국사회 재설계 / 공공성 그리고 착한성장사회”

▌발행 2014년 11월
▌발행인 이웅모
▌발행처 SB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
▌전화 02-2113-4192
▌팩스 02-2113-4238
▌웹사이트 http://future.sbs.co.kr

* 이 책의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제12차 미래한국리포트

한국사회 재설계

공공성 그리고 착한성장사회

2014 · SBS

THE 12th FUTURE KOREA REPORT

주최 SBS | 미디어파트너 SBS CNBC | 지식파트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발전연구소

협찬사 SAMSUNG | HYUNDAI MOTOR GROUP | posco | SAMSUNG 삼성전자 | GS 칼텍스 | 즐겁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 SPC | 하나금융그룹 | 하나은행 | SMART BANK 외환은행 | KB금융그룹 | 내일을 향한 금융 한화생명 | 삼성생명 | SAMSUNG | 신한금융그룹 | LOTTE

미래한국리포트

FUTURE KOREA REPORT